

국립국어원 2025-04-02

발간 등록 번호

11-1371028-100010-01

논증적 글쓰기 능력 진단 기준안



국립국어원



책을 펴내며

언어생활을 흔히 ‘말글살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언어생활의 핵심이 말과 글에 있다는 것을 뚜렷이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언어’를 “생각, 느낌 따위를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에 쓰는 음성, 문자 따위의 수단. 또는 그 음성이나 문자 따위의 사회 관습적인 체계.”로 풀이해 놓았습니다. 수어라는 예외가 있긴 하지만, 말(음성)과 글(문자)이 사실상 언어의 모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언어 능력을 제대로 갖추려면 말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글도 잘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디지털 시대로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글쓰기 능력이 정보 전달의 핵심 역량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직무 수행 및 일상생활에서도 글쓰기 능력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쓰기 능력을 진단하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2022년부터 연구를 진행하여 글쓰기 교육과 글쓰기 능력 진단에 두루 활용할 수 있는 <논증적 글쓰기 능력 진단 기준안>을 개발하였습니다. <논증적 글쓰기 능력 진단 기준안>은 이 연구를 위해 수집한 글쓰기 자료 12,000건에 대한 채점과 재채점, 전문가 검토와 토론 등을 다각도로 진행하여 논증적인 글이 갖추어야 할 요소는 무엇이고, 글쓰기 능력을 어떤 기준으로 진단해야 하는지를 체계화한 것입니다.

국립국어원은 논증적 글뿐만 아니라 글쓰기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표현 집중형 글쓰기 능력 진단 기준안>도 함께 개발하였습니다. 문장과 어휘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표기 규범과 글쓰기 관습을 숙지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표현’ 능력은 모든 분야의 글쓰기에서 기초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논증적 글쓰기 능력 진단 기준안>과 <표현 집중형 글쓰기 능력 진단 기준안>에 제시된 평가 준거들을 적용한 사례를 채점 결과별로 풍부하게 제시해 놓아 글쓰기를 배우는 이나 가르치는 이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책이 글쓰기 교육과 평가 현장에서 유용한 참고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겐 말은 있으나 글은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종의 위대한 발명이 있고 나서 막혀 있던 지식과 정보의 물줄기가 온 백성과 온 나라로 퍼지게 되었고, 이는 곧 우리 역사의 진보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온갖 지식과 정보가 범람하고 있는 지금은, 역설적이게도 아무렇게나 쓴 글들이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 공동체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글의 중요성, 글을 잘 써야 하는 이유를 되새겨야 할 때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 글을 맺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립국어원장



목 차

국립국어원 <논증적 글쓰기 능력 진단 기준안>	7
I. 내 용	9
1. 문제 상황 제시	10
2. 주장 제시	17
3. 이유 · 근거의 적절성	23
4. 이유 · 근거의 충분성	29
5. 반론 고려 및 대응	35
II. 조 직	41
6. 글 전체 조직	42
7. 문단 내 조직	48
III. 표 현	55
8. 문장과 어휘	56
9. 어문 규범과 관습	63
부 록: 표현 집중형 글쓰기 능력 진단 기준안	71
1. 문체 및 어조	72
2. 어문 규범	74
3. 문장의 정확성	75
4. 어휘 의미	78
5. 표현의 간결성	80
6. 독자에 대한 고려	81
붙 임: 논증적 글쓰기 능력 채점 사례에 활용한 문항	82

국립국어원 <논증적 글쓰기 능력 진단 기준안>

영역	준거	하위 준거(기준)	배점	비고
내용	1. 문제 상황 제시	1-1. 문제 상황에 대한 제시가 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가?	5	* 글의 분량, 주어진 논제나 문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지 않을 수 있음
		1-2. 문제 상황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는가?		
	2. 주장 제시	2-1. 주장이 논제에 부합하는가?	5	
		2-2. 주장이 글 전체에 일관되고 뚜렷한가?		
	3. 이유·근거의 적절성	3-1. 주장 또는 하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나 근거가 적절한가?	5	
	4. 이유·근거의 충분성	4-1. 주장이나 하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이유나 근거가 충분한가?	5	
		4-2. 이유나 근거의 아이디어를 깊이 있게 전개하는가?		
	5. 반론 고려 및 대응	5-1. 반론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졌는가?	5	
		5-2. 반론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를 깊이 있게 전개하는가?		
소계		25	* <1>을 평가하지 않을 경우 20점	
조직	6. 글 전체 조직	6-1. 서-본-결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형식 문단과 내용 문단 모두 포함)	5	
		6-2. 문단 배열이 유기적이고 자연스러운가?		
	7. 문단 내 조직	7-1. 뒷받침 문장을 사용하여 문단의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였는가?	5	
		7-2. 문단별로 하나의 중심 생각이 전개되는가?		
		7-3. 문단을 이루는 여러 문장들이 서로 긴밀한 관계로 연결되는가?		
	소계		10	
표현	8. 문장과 어휘	8-1. 문장 길이가 적절하고 그 표현이 자연스러운가?	5	
		8-2. 문장의 의미가 명료하고 그 표현이 효과적인가?		
		8-3. 어휘 사용이 문맥에 맞는가?		
	9. 어문규범과 관습	9-1.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준수하였는가?	5	
		9-2. 장르 관습에 맞는 문어적 표현을 사용하는가?		
	소계		10	
총점		45	* <1>을 평가하지 않을 경우 40점	



I 내용

1. 문제 상황 제시
2. 주장 제시
3. 이유·근거의 적절성
4. 이유·근거의 충분성
5. 반론 고려 및 대응

1 문제 상황 제시

하위 준거	1-1. 문제 상황 제시의 적절성(문제 상황에 대한 제시가 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가?)
	1-2. 문제 상황 설명의 정보성(문제 상황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는가?)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상황은 주로 서론에서 제시되지만, 글의 중간중간에 드러날 수 있음 - 문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었거나,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문제 상황에 대한 설명이 길어진 경우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 어려움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점)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논제에 밀접하게 매우 효과적으로 제시되며,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구성됨 - (4점)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대체로 논제에 밀접하게 효과적으로 제시되며, 대부분 필요한 정보들로 구성됨 - (3점)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논제와 관련되어 있으나, 정보성이 다소 떨어짐 - (2점)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논제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정보들로 구성됨 - (1점) 문제 상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거나 이해했지만 매우 빈약함
비고	- 요구되는 글의 분량, 주어진 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지 않을 수 있음

‘문제 상황 제시’는 필자가 논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것을 문제 상황과 잘 연결 지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 상황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잘 제시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준거이다. 이를테면 논의 배경이 무엇인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 상황 제시’를 적용할 때의 핵심은 논제와 연결된 문제 상황에 대한 정보, 즉 논제와 관련된 배경 정보가 ‘적절하게’ 그리고 ‘충분히’ 글에 제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들 각각은 ‘문제 상황 제시의 적절성’, ‘문제 상황 설명의 정보성’이라는 하위 준거로 진단 기준안에 제시되었다.

문제 상황은 주로 글의 도입 부분에서 제시되는데, 필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로봇세 도입에 관한 문항의 경우, 로봇세가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으로서의 로봇 기술이 발달하고 그것이 상용화된 최근의 상황 등을 제시하면서 글을 시작할 수도 있고, 로봇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면서 그 개념을 간단히 밝힐 수도 있다. 핵심은, 이러한 문제를 왜 공론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얼마만큼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판단하는 것, 그리고 드러낸 내용이 논제와 어느 정도로 관련성이

깊은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제시된 문항에 이미 충분히 문제 상황이 제시되어 있거나, 논제 자체가 문제 상황을 제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제 상황 제시’를 평가 준거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요구되는 글의 분량이 몇백 자 수준으로 적으면 주장과 논거, 반론과 재반론 등 논증에 필수적인 내용을 기술하기에도 빠듯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문제 상황 제시’를 평가 준거에서 제외할 수 있다. ‘문제 상황 제시’는 ‘내용’ 영역의 다른 준거들에 비해 비논증적인 성격에 가깝고, ‘서론-본론-결론’의 구조가 잘 갖추어졌는지와 문단이 유기적으로 잘 배열되었는지를 보는 ‘글 전체 조직’ 준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진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문제 상황 제시 채점 사례

- ⑤ 5점 사례: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논제에 밀접하게 매우 효과적으로 제시되며,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구성됨

<p>답안 사례</p>	<p><u>4차산업혁명이 시작된 지금, 우리 생활에선 많은 것들이 기계화되었다. 특히 로봇이 노동으로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로봇세를 지지하는 의견이 등장한 만큼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산업 발전의 저해를 우려하며 로봇세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로봇세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산업 발전 저해보다 더 큰 문제들이 생길 것이다. 로봇세는 도입되어야 한다.</u></p> <p><u>최근 가장 큰 사회 문제는 청년들의 취업과 실업, 즉 일자리 문제이다. 이런 사회 문제에 더하여 점차 AI가 일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로봇세 도입은 이 문제들을 완화해 줄 것이다. 로봇세는 세금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존 취업 문제에 더해 AI에 빼앗기는 직업들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복지에도 도움을 줘 경제에 좋은 선순환이 될 것이다. 일자리를 대체하는 로봇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생길 문제들을 대처하는 열쇠인 것이다.</u></p> <p>로봇세에 반대하는 측의 입장 중 하나는 산업 발전의 저해이다. 이는 로봇세를 부과한다면 AI와 같은 기술, 산업 발전들이 주춤하며 저해된다는 것이다. 결국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도 뒤처져 국가 경제 상황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과학 발전 측면에서만 고려한 주장이다. 로봇세를 도입하지 않고 AI들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대체하면, 실업, 빈부격차 등 다양한 문제가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 경제 상황의 악화에 힘을 더해야 할 것이다. 오직 산업 발전을 위한다면 미래 성장을 위해 시작한 투자가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로봇으로 인력을 대체해 원래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아 로봇을 가진 자본가는 부를 쌓는 상황이 온다. 반대로 소유하지 못한 자본가, 로봇으로 인한 실업자는 가난해진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인 경제는 옳지 않다. 로봇세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국가의 빈곤층, 소외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세금의 용도로 쓰인다면 빈부격차도 약화할 수 있을 것이다.</p> <p><u>AI가 등장하며 피할 수 없는 로봇세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찬성 측은 AI의 문제들이 로봇세로 완화할 수 있으므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반대하는 입장은 이런 로봇세로 산업이 주춤하며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말한다. 하지만 발전만을 생각하기보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공생할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u></p>
<p>해설</p>	<p>윗글은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문제 상황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적절하게 잘 제시하였으므로 '내용 1'의 5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 밑줄 친 바와 같이, 오늘날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우리 생활에서 많은 것들이 기계화됨에 따라 로봇이 노동으로 생산하는 경제적인 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배경과 논제에 부합하는 맥락적 정보를 포함하여 문제 상황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다.</p> <p>또한 마지막 문단에서는 인공 지능이 등장함에 따라 대두된 로봇세에 대한 쟁점을 다시 언급하여, 찬성 측과 반대 측 주장의 배경으로서 논제를 둘러싼 문제 상황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다.</p>

- ④ 4점 사례: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대체로 논제에 밀접하게 효과적으로 제시되며, 대부분 필요한 정보들로 구성됨

<p>답안 사례</p>	<p><u>최근 몇 년간 ‘혐오’와 ‘혐오 표현’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혐오 표현이란 정당화될 수 없는 혐오 감정에 근거하여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 공개적으로 모욕, 비하, 멸시, 위협을 하거나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혐오 표현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어쩌면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는 중에 우리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u> 이러한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가능할까? 나는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현재 한국 사회에서 ‘혐오 표현’이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을 특정하기 힘들다.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급식충’, ‘잼민이’, ‘결정 장애’와 같은 표현도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 이런 표현들까지도 법적으로 규제하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넓어 자칫하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p> <p>다음으로, 국가가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고 해서 혐오 표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나치를 경험한 유럽 국가들은 인종적 혐오를 처벌하는 법률을 많이 도입하였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독일에는 혐오 표현을 폭넓게 규정해 처벌할 수 있는 형법(독일 형법 제130조)이 있고, 영국과 프랑스 등지에도 혐오 표현 규제법이 있다. 그러나 그런 제약들로 우익과 극우의 영향력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또, 한국에서도 2021년 1월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시행되고 일부 우파들이 검찰로 송치된 적이 있지만 그 후에도 광주 항쟁에 대한 왜곡은 계속되고 있다.</p> <p>혐오 표현의 범위는 너무 광범위하고, 국가가 규제한다고 해서 혐오 표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혐오 표현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널리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방법이 법적 규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 캠페인, 사회 영역 내의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p>
<p>해설</p>	<p>윗글은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대체로 논제에 밀접하게 효과적으로 제시되었고, 대부분 필요한 정보들로 구성되었으므로 ‘내용 1’의 4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 밑줄 친 바와 같이, 서론에서 최근 몇 년간 혐오와 혐오 표현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음을 언급한 뒤, 혐오 표현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이어서 이러한 혐오 표현이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잘 드러내었다.</p> <p>그러나 5점 사례와 비교해 보면,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된 문제 상황에 대한 배경과 맥락적 정보들을 추가로 제시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풍성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p>

③ 3점 사례: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논제와 관련되어 있으나, 정보성이 다소 떨어짐

<p>답안 사례</p>	<p>로봇세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u>최근 뉴스를 보면 로봇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이 맡았던 일을 로봇이 대신해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로봇 도입을 하는 업체의 입장으로는 로봇이 대신 일을 해 줌으로써 인건비를 아낄 수 있고, 업무 실수가 없으며 일의 정확도가 높아 오차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업체 입장에서 보면 단점보단 장점이 더 많아서 로봇 도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u></p> <p><u>하지만 결코 이러한 로봇 도입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u> 그뿐만 아니라 로봇들이 어떤 분야에 대한 일을 하는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하니 그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분야에 접근하려는 사람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려는 의욕이 떨어져서 직장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죠.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로봇세 도입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로봇으로 이익을 얻는 업체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편차를 완화해야 불완전한 사회가 나아지기 때문이죠. 로봇의 발달로 인해 줄어드는 일자리가 많아지지만 그에 반해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도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 쪽과 로봇이 대체할 수 없을 일들을 사람들이 맡아야 할 것입니다. 일을 구하려는 의지 없이 지원금만 받는 사람들이 많을 거니 사회나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적극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로봇세를 도입하지 않으면 경제가 급진적으로 악화하게 될 거고 나라의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업체가 로봇으로 인해 얻는 이익으로 편차를 줄이고자 현재 최저시급제도와 같이 로봇노동으로 경제적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로봇세 도입이 된다면 오히려 사회가 더 안정해지고 발전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봇세 도입은 사람들과 사회를 위해 적극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해설</p>	<p>윗글은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논제와 관련되어 있으나, 정보성이 다소 떨어지므로 ‘내용 1’의 3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 밑줄 친 바와 같이, 최근 뉴스에 관한 정보를 언급 하면서 로봇의 발달로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신하게 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로봇을 도입함으로써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언급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 사람들의 일자리 상실)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p> <p>그러나 해당 부분은 문제 상황의 배경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일부 포함하기는 하지만, 로봇세 도입과 관계된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로봇의 발달과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만 제시되어 있을 뿐, 핵심 논제인 ‘로봇세’ 도입과 관계된 긍정적·부정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p>

❶ 2점 사례: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논제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정보들로 구성됨

<p>답안 사례</p>	<p><u>언제부터일까? 세상이 혐오 표현들로 뒤덮이기 시작한 게. SNS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혐오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하는 사람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본인이 혐오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혐오 표현이 난무하고, 혐오 행위 자체가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는 사회는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지고 말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분열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인, 혐오 표현. 우리 사회는 이대로 괜찮을까?</u></p> <p>노 키즈 존(No Kids Zone). 말 그대로 어린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구역으로 요즘 아주 핫한 논쟁거리이다. 분위기 좋은 SNS 감성 카페와 음식점, 베이커리 등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큰 소음이 용납되지 않는 곳의 출입문에는 노 키즈 존 팻말이 붙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업주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추구한다고 하여 어린 손님의 출입을 제한해도 되는 것일까? 노 키즈 존은 '미성숙한 어린이들은 시끄럽게 떠돌고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란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편협한 사고에서 출발한 혐오 표현의 연장선으로 법적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p> <p>어린이들이 다칠 위험성이 있는 공간이 아닌, 오로지 업주가 추구하는 분위기에 맞지 않아 설정하는 노 키즈 존은 어떠한 변명도 필요치 않은 차별 행위이다. 국가가 나서 노 키즈 존과 같이 차별을 조장하고 정당화하는 혐오 표현의 사용을 제재해야 한다. 혐오 표현이 차별을 조장하고 정당화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과 분열을 유발하고 심화시킨다. 게다가, 혐오의 대상자는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사회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고 고립감을 느끼며 세상을 차단하고 단절된 채로 삶을 살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가 꼭 필요하다.</p> <p><u>혐오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득이 생기거나 혜택을 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혐오 표현의 표적이 되는 사람들, 혐오를 주도하는 사람들,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전부 마음의 상처와 편견만이 남게 된다. 사회의 악, 혐오 표현. 이대로 놔두었다간 우리 모두 혐오 행위에 잠식되고 말 것이다. 차근차근 썩은 가지들을 잘라내고 구정물이 아닌 맑은 물을 준다면 새하얀 꽃들이 만개한 세상이 찾아오지 않을까?</u></p>
<p>해설</p>	<p>윗글은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논제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내용 1'의 2점 사례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 먼저, 서론에서는 밑줄 친 바와 같이 혐오 표현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분열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 혐오 표현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혐오 표현이 “난무하는” 현 상황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를 둘러싼 쟁점과 같이 논제와 관련이 있는 배경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결론의 밑줄 친 부분도 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상황과는 관련성이 적은 정보들로 구성되었다.</p>

② 1점 사례: 문제 상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거나 이해했지만 매우 빈약함

<p>답안 사례</p>	<p>나는 로봇세 도입에 찬성한다. 일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보다 로봇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p> <p>우선 로봇이나 AI를 도입함으로써 병에 걸려서 침대에서 누워있기만 해야 하는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도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일을 할 수가 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본 뉴스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원격으로 편의점에서 일하는 모습이 보도되어 있었다. 그 사람들은 편의점에 있는 계산대에 AI 점원으로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이런 로봇의 활용은 오히려 일하고도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p> <p>그리고 같은 편의점으로 예를 들면 로봇이 계산을 하면 상품을 정리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다른 업무에만 집중할 수도 있고 더 효율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p> <p>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 꼭 해야 하는 일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 필요한 일들이다. 심리상담을 로봇이 와 해도 도움이 안 될 거고 배우나 가수가 전부 다 버추얼이었다면 사람 안에 있는 감정들이 덜 표현될 것이다.</p> <p>그래서 나는 사람과 로봇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로봇이 함으로써 더 효율적이거나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일은 계속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보다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p> <p>그리고 그런 로봇이나 AI도 결국 처음에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일과 로봇이 서로 좋은 점을 인정하고 공유하면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p>
<p>해설</p>	<p>윗글은 문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내용 1'의 1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 첫 문단에서 "로봇세 도입에 찬성한다"라는 주장을 바로 제시하고는 로봇세 도입 배경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대한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서론뿐만 아니라 글의 어느 부분에서도 논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드러나 있지 않다.</p>

2 주장 제시

하위 준거	2-1. 주장의 적절성(주장이 논제에 부합하는가?)
	2-2. 주장의 명료성(주장이 글 전체에 일관되고 뚜렷한가?)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장은 논제에 대한 입장(글 전체의 주장)으로 한정하여 판단하여야 함 - 어떤 정책 명제에 대한 찬반 주장을 쓰는 것이 논제로 주어진 경우, 정책에 대한 찬반 보다는 그러한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회 문제나 현상이 옳지 않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경우는 주장이 논제에 어긋나거나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여 2점 이하를 부여함 - 하위 주장은 '3. 이유·근거의 적절성'에서 평가함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점) 주장이 논제에 부합하며, 글 전체에 걸쳐 매우 일관되고 뚜렷함 - (4점) 주장이 논제에 부합하며, 글 전체에 걸쳐 대체로 일관되고 뚜렷함 - (3점) 주장이 논제에 대체로 부합하나, 일관성이나 명료성이 다소 부족함 - (2점) 주장이 논제에서 다소 어긋남. 또는 주장이 논제와 관련은 있지만 일관성이나 명료성이 매우 부족함 - (1점) 주장이 논제에 부합하지 않음

‘주장’은 논증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논증적 글쓰기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중핵적인 내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장 제시의 하위 준거로는 ‘주장의 적절성’과 ‘주장의 명료성’이 있다.

‘주장의 적절성’은 제시된 문항에서 요구하는 과제 상황을 벗어나지 않는 주장이 제시되어야 함을 뜻한다. 예를 들어, ‘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한 입장을 논증해야 하는 문항인데 ‘인종 차별의 문제’를 중심에 두고 주장을 전개하거나 ‘혐오 표현의 판정 기준’을 다루었다면, 이는 일관된 논지를 전개하였어도 주장이 논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주장의 적절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주장의 명료성’은 주장이 일관되고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함을 뜻한다. 예를 들어, ‘로봇세 도입’에 대한 입장을 논증해야 하는 문항인데 앞에서는 로봇세 도입에 반대하는 로봇업계의 입장을 제시하다가, 뒤에서는 로봇세 도입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의 입장을 제시하면서 글을 끝맺었다면, 로봇세 도입에 대한 필자의 입장이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장의 명료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 주장 제시 채점 사례

⑤ 5점 사례: 주장이 논제에 부합하며, 글 전체에 걸쳐 매우 일관되고 뚜렷함

<p>답안 사례</p>	<p>지난 3월, 70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제동 장치로 오인해 사고를 냈다. 1월에는 60대 운전자, 지난해 8월에는 80대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 세 사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운전자가 모두 60세 이상의 고령인이라는 것이다. 통계청의 가해자 연령층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2021년에 전년 대비 다른 연령층은 교통사고가 감소했지만 60세 이상은 모두 증가했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점점 증가하면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 나는 이 제도에 반대한다.</p> <p>반대하는 이유는 2가지이다. 첫째, 누구나 돌발 상황 대처에 미숙할 수 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의 가장 주된 이유는 나이가 들면 사고 대처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초보 운전자 또한 그렇다. 초보 운전자는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단순히 넘기면서 고령 운전자에게는 면허를 반납하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고령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면허 반납 시 10만 원이 충전되어 있는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그러나 평생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10만 원은 부족한 금액이다. 물가 상승으로 교통비가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면허 반납은 고령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p> <p>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사고 대처 교육 의무화가 있다. 현재 고령 운전자의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면 면허 반납을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사고 상황을 두고 일정 연령 이상의 운전자에게 의무 교육을 시행하면 된다. 단순히 강의식이 아닌 실제로 체험하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행하면 면허를 반납하지 않아도 사고율을 줄일 수 있다. 둘째, 면허 반납을 지속하면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처럼 10만 원만을 지원하는 것은 부족한 금액이다. 따라서 지원금을 높이거나 달마다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p> <p>면허 반납 찬성 측은 고령 운전자의 판단 능력이 저하되기에 면허 반납이 필요하다고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초보 운전자도 마찬가지이며, 면허를 반납한다면 고령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일정 연령 이상의 운전자에게 사고 대처 교육을 의무화하거나 면허를 반납한다면 교통비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p>
<p>해설</p>	<p>윗글은 주장이 논제에 부합하며, 글 전체에 걸쳐 매우 일관되고 뚜렷하게 주장을 전개하였으므로 '내용 2'의 5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 서론에서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련 정보를 제시한 이후, 밑줄 친 바와 같이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제한에 반대하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 논제에 대한 입장, 즉 글 전체의 주장으로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제한을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서술하였다.</p> <p>또한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밑줄 친 바와 같이, 다른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여 다시 한번 명확하게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제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기술하였다.</p>

④ 4점 사례: 주장이 논제에 부합하며, 글 전체에 걸쳐 대체로 일관되고 뚜렷함

<p>답안 사례</p>	<p>최근 몇 년간 ‘혐오’와 ‘혐오 표현’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혐오 표현이란 정당화될 수 없는 혐오 감정에 근거하여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 공개적으로 모욕, 비하, 멸시, 위협을 하거나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혐오 표현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어쩌면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는 중에 우리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u>이러한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가능할까? 나는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u> 우선 현재 한국 사회에서 ‘혐오 표현’이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을 특정하기 힘들다.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급식충’, ‘잼민이’, ‘결정 장애’와 같은 표현도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 이런 표현들까지도 법적으로 규제하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넓어 자칫하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p> <p>다음으로, 국가가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고 해서 혐오 표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나치를 경험한 유럽 국가들은 인종적 혐오를 처벌하는 법률을 많이 도입하였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독일에는 혐오 표현을 폭넓게 규정해 처벌할 수 있는 형법(독일 형법 제130조)이 있고, 영국과 프랑스 등지에도 혐오 표현 규제법이 있다. 그러나 그런 제약들로 우익과 극우의 영향력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또, 한국에서도 2021년 1월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시행되고 일부 우파들이 검찰로 송치된 적이 있지만 그 후에도 광주 항쟁에 대한 왜곡은 계속되고 있다.</p> <p><u>혐오 표현의 범위는 너무 광범위하고, 국가가 규제한다고 해서 혐오 표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u> 물론 혐오 표현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널리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방법이 법적 규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 캠페인, 사회 영역 내의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p>
<p>해설</p>	<p>윗글은 주장이 논제에 부합하며, 글 전체에 걸쳐 대체로 일관되고 뚜렷하다는 점에서 ‘내용 2’의 4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 밑줄 친 바와 같이,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를 반대한다는 선언적 진술은 드러나지 않으나, 대체로 일관되게 법적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p> <p>다만, 5점 사례와 비교해 보면, 혐오 표현은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규제를 반대한다는 진술과 혐오 표현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 인정하면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법적 규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진술은 다소 서로 모순적이어서 해당 글에서 필자의 주장을 약화하는 측면이 있다.</p>

③ 3점 사례: 주장이 논제에 대체로 부합하나, 일관성이나 명료성이 다소 부족함

<p>답안 사례</p>	<p><u>나는 고령 운전자 면허 제한에 찬성한다.</u> 흔히 인터넷이나 신문 기사에서 교통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주제이다. 교통사고의 대표적인 예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차량의 문제점으로 인한 사고 등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아무리 운전 실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는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운전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위와 같은 상황이 찾아와도 힘든데 고령 운전자는 이러한 경우를 쉽게 대처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선 첫 번째 이유로는 퇴화이다. 인간은 누구나 다들 나이를 먹는다. 또한 나이를 먹게 되면 신체도 나이를 먹게 되는데 운동신경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순발력과 민첩성이 젊었을 때보단 많이 줄어든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하게 된다면 사고 발생 확률은 청장년층에서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기 때문에 교통질서가 어지럽혀질 것이고 죄 없는 시민들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로는 익숙함이다. 대부분의 고령 운전자는 젊었을 때 운전면허를 획득했을 것이다. 그렇다 보니 모든 운전 상황에서 익숙함에 속아 새로 개편된 교통 법안이나 교통 개정안에 대해 잘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령 운전자 면허 제한에 대하여 정부의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낮은 확률도 아닌데 사고 없는 교통 생활을 이어나가려면 특정 나이 때부터 매해마다 시험을 다시 치다거나 교통교육을 받아야 운전하는 데 있어서 사고 발생 확률이 줄어들 거라 생각한다. <u>위와 같은 예시와 해결책이 아닌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제한은 찬성할 수 없다.</u> 모든 사람은 운전하는 데 있어 다 사고 없이 운전하는 것을 원할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생각했던 대로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는 모든 예시를 모색한 뒤 사건 사고를 줄여나간다면 교통사고는 확실히 많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의 희생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u>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령 운전자 면허 제한에 찬성한다.</u></p>
<p>해설</p>	<p>윗글은 주장이 논제에 대체로 부합하나, 일관성이나 명료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에서 ‘내용 2’의 3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 밑줄 친 바와 같이, 서론 부분에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제한을 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간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를 통해 대체로 찬성 입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필자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p> <p>그러나 뒷부분의 밑줄 친 바를 살펴보면, 위에서 제시한 예시와 해결책이 아닌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제한은 찬성할 수 없다”라고 하여 주장의 명료성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시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제한에 찬성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여, 전체적으로 주장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고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p>

❖ 2점 사례: 주장이 논제에서 다소 어긋남. 또는 주장이 논제와 관련은 있지만 일관성이나 명료성이 매우 부족함

<p>답안 사례</p>	<p>나이가 들면 신체적 노화로 인해 각종 능력 등이 감소하고, 이는 운전 중 사고 위험 증가에 큰 영향을 준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와 관련해 조사한 기사에 첨부된 가해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현황 그래프를 보면 고령 운전자는 다른 연령대의 운전자들보다 교통사고 유발률, 각 사고에 해당하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의 고령화라는 사회 현상으로 인해 총인구 중에 고령자의 인구 비율이 점차로 많아지고, 이와 더불어 고령 운전자 증가 폭도 점점 더 커져 앞으로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u>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제한에 대한 대안도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u></p> <p><u>하지만, 위의 사례만 가지고 선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u> 고령 운전자 중에는 주행 경험이 풍부하고, 안전 운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그들의 운전이 미숙할 것이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또한 일부 지역이나 상황에서는 대중교통 수단이 제한적일 수 있는데 이러한 지역이나 상황에서 면허를 제한하게 된다면 해당 운전자들의 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u>고령 운전자의 면허 제한은 그들의 사회 참여를 간접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고령 운전자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u></p> <p><u>어떤 상황에서도 적용되듯이 한쪽으로 너무 편향되지 않고, 각 대안의 이점을 잘 종합시켜 결론을 도출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u> 노화에 따른 각종 능력의 감소가 운전 중 사고 위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점, 나이만으로 운전 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이 두 가지 점을 종합해 운전 능력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이 평가는 개별적으로 시행되면 될 것이다. 나이에 따른 사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의견이므로 이 내용을 토대로 연령대별로 운전 평가 시행 주기를 조정하면 될 것이다. 운전면허 제한으로 인해 도출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 활동 범위 제한 등의 부작용은 대중교통 개편, 경제적인 지원 등의 추가 대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u>쉽게 결론지을 수 있는 주제는 아니겠지만, 여러 의견의 장단점을 서로 잘 상쇄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과정이 반복된다면 좋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u></p>
<p>해설</p>	<p>윗글은 주장이 논제와 관련은 있지만 명료성이 매우 부족하므로 ‘내용 2’의 2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 서론의 밑줄 친 바와 같이, 필자는 고령 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 증가에 관한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제한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p> <p>여기까지 살펴보면, 필자는 고령 운전자 면허 제한을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어서 두 번째 문단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위의 사례만 가지고 선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곧 “고령 운전자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여, 고령 운전자 면허 제한을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마지막 문단에서는 다시 각 대안의 이점을 잘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여 글 전반에서 필자의 주장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p> <p>심지어 마지막 문장에서는 “여러 의견의 장단점을 서로 잘 상쇄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과정이 반복된다면 좋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라고 하여 필자의 주장을 다시 유보하였는데, 이러한 마무리의 주장의 명료성을 떨어뜨리므로 감점 요인이 된다.</p>

② 1점 사례: 주장이 논제에 부합하지 않음

<p>답안 사례</p>	<p><u>나는 로봇세 도입에 찬성한다. 일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보다 로봇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u></p> <p>우선 로봇이나 AI를 도입함으로써 병에 걸려서 침대에서 누워있기만 해야 하는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도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일을 할 수가 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본 뉴스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원격으로 편의점에서 일하는 모습이 보도되어 있었다. 그 사람들은 편의점에 있는 계산대에 AI 점원으로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이런 로봇의 활용은 오히려 일하고도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p> <p>그리고 같은 편의점으로 예를 들면 로봇이 계산을 하면 상품을 정리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다른 업무에만 집중할 수도 있고 더 효율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p> <p>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 꼭 해야 하는 일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 필요한 일들이다. 심리 상담을 로봇이 와 해도 도움이 안 될 거고 배우나 가수가 전부 다 버추얼이었다면 사람 안에 있는 감정들이 덜 표현될 것이다.</p> <p><u>그래서 나는 사람과 로봇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u> 로봇이 함으로써 더 효율적이거나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일은 계속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보다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p> <p><u>그리고 그런 로봇이나 AI도 결국 처음에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일과 로봇이 서로 좋은 점을 인정하고 공유하면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u></p>
<p>해설</p>	<p>윗글은 주장이 논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내용 2’의 1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 서론의 밑줄 친 바와 같이, ‘로봇세 도입에 찬성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처럼 보이지만, 글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로봇세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직업과 일자리의 측면에서 로봇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찬성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p> <p>또한 글의 끝부분도 사람과 로봇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하는 내용과 인간과 로봇이 서로 좋은 점을 인정하고 공유하며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이 역시 논제인 로봇세 도입에 관한 주장이나 의견과는 관련이 없다.</p>

3 이유·근거의 적절성

하위 준거	3-1. 주장-이유·근거 연결(추론)의 적절성(주장 또는 하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나 근거가 적절한가?)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에 해당하면 3점 이하를 부여함 * 제시된 이유나 근거가 사실이나 일반적인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제시된 이유나 근거가 주장과 긴밀히 연관되지 않는 경우 * 제시된 이유나 근거에 논리적인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점) 이유와 근거가 매우 적절하여 설득력이 높음 - (4점) 이유와 근거가 대체로 적절하여 다소 설득력이 있음 - (3점) 이유나 근거 가운데 일부가 적절하지 않으나, 대체로 수용할 만함 - (2점) 이유와 근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설득력이 떨어짐 - (1점) 이유와 근거가 대부분 적절하지 않아 설득력이 매우 낮음

‘이유·근거의 적절성’은 글에 나타난 주장이나 하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이유나 근거가 질적으로 타당하고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준거이다. 이유는 주로 ‘~이기 때문이다’의 형식으로 제시되는 명제로 볼 수 있는데, ‘~는 공평하지 않기 때문’, ‘~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 ‘~에게만 특혜를 주기 때문’, ‘~을 저해하기 때문’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를 다시 입증하기 위해 동원하는 외부 자료들을 ‘근거’라고 한다.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하나의 대명제를 ‘주장’으로 본다면, 그 주장은 대체로 각각의 문단들이 뒷받침하는 구조로 구성된다. ‘주장-이유’의 관계에서 각 문단들은 여러 개의 ‘이유’의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개별 문단 차원에서 보면 각각의 이유는 다시 하나의 중심 생각을 지닌 ‘주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글 전체의 ‘주장’과 구별하는 차원에서 개별 문단의 중심 생각으로서의 ‘이유’는 ‘하위 주장’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기도 한다.

➔ 이유·근거의 적절성 채점 사례

⑤ 5점 사례: 이유와 근거가 매우 적절하여 설득력이 높음

<p>답안 사례</p>	<p>로봇세에 반대하는 이유는 <u>첫 번째로 로봇세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로봇의 범위와 형태는 다양하여 로봇세의 규정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 키오스크나 컴퓨터 프로그램, 모바일 뱅킹 등도 인간의 일을 대체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u> 과세 대상을 설정한다고 해도 기업들은 로봇세를 회피하기 위해 기준에서 약간 벗어나거나 기능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조세 부담을 회피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세금이 의미 있게 거둬질 수 없다.</p> <p><u>두 번째 이유는 로봇세가 성장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세계경제포럼에서는 AI가 8500만 개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대신 9700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할 것으로 보았다. 국내에서도 운송서비스, 음식점, 상품중개서비스 등의 일자리는 감소하지만 전체 일자리 수는 221만 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들은 현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만약 로봇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세금을 또 내게 되는 이중과세가 되어 기업에 자금 압박이 되어 기술발전과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u></p> <p><u>마지막 이유는 로봇세로 인한 기본소득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u> 로봇세를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는 로봇세를 거두어 기본소득의 재원 조달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u>그러나 기본소득 지급은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u> 로봇세를 부과해 얻은 돈을 재분배하는 과정은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유사하다. <u>2020년 5월 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축산물의 가격이 급격히 올랐는데, 이때 삼겹살 평균 가격은 22.2%나 상승했다. 이러한 경험에 미루어 봤을 때 로봇세를 통한 소득의 재분배가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될 것이다.</u> 또 기본소득은 복지병을 유발할 수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근로 의욕이 저하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p> <p>로봇세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로봇세가 공정한 경쟁을 보장, 대량 실직과 사회 계층의 고착화 방지를 근거로 제시한다. 먼저 세금 부과로 기업의 로봇 독점을 막는다면 로봇을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을 주고 로봇 사용을 회피하여 기업 발전이 저하될 수 있다. 기업이 로봇세에 부담을 느껴 원가를 낮출 기회를 포기하면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계층 유동성은 더욱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로봇세의 도입보다 기본생활 수준의 향상과 양질의 교육 제공이 계층 고착화를 막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p>
<p>해설</p>	<p>윗글은 주장과 그에 대한 이유나 근거가 매우 적절하여 설득력이 높아 ‘내용 3’의 5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 밑줄 친 바와 같이, 필자는 로봇세에 반대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하면서 각각에 대해 적절한 근거를 들어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로봇세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키오스크나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이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다른 유사한 기기와 프로그램들을 예시하면서 로봇의 범위와 형태가 다양하여 로봇세 규정의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p> <p>두 번째는 “로봇세가 성장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언급된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즉, 인공 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전체 일자리 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로봇세가 도입된다면 기술의 발전과 성장을 막을 수 있음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마지막으로, 로봇세로 인한 기본소득 지급은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근로 의욕을 저하시켜 생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하위 주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다.</p>

④ 4점 사례: 이유와 근거가 대체로 적절하여 다소 설득력이 있음

<p>답안 사례</p>	<p>최근 몇 년간 ‘혐오’와 ‘혐오 표현’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혐오 표현이란 정당화될 수 없는 혐오 감정에 근거하여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 공개적으로 모욕, 비하, 멸시, 위협을 하거나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혐오 표현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어쩌면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는 중에 우리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가능할까? <u>나는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현재 한국 사회에서 ‘혐오 표현’이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을 특정하기 힘들다.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급식충’, ‘찜민이’, ‘결정 장애’와 같은 표현도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 이런 표현들 까지도 법적으로 규제하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넓어 자칫하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u></p> <p>다음으로, 국가가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고 해서 혐오 표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나치를 경험한 유럽 국가들은 인종적 혐오를 처벌하는 법률을 많이 도입하였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u>독일에는 혐오 표현을 폭넓게 규정해 처벌할 수 있는 형법(독일 형법 제130조)이 있고, 영국과 프랑스 등지에도 혐오 표현 규제법이 있다. 그러나 그런 제약들로 우익과 극우의 영향력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또, 한국에서도 2021년 1월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시행되고 일부 우파들이 검찰로 송치된 적이 있지만 그 후에도 광주 항쟁에 대한 왜곡은 계속되고 있다.</u></p> <p>혐오 표현의 범위는 너무 광범위하고, 국가가 규제한다고 해서 혐오 표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혐오 표현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널리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방법이 법적 규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 캠페인, 사회 영역 내의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p>
<p>해설</p>	<p>윗글은 주장에 대한 이유나 근거가 대체로 적절하여 다소 설득력이 있으므로 ‘내용 3’의 4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 서론의 밑줄 친 바와 같이, 필자는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대한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혐오 표현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처벌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하였고, 두 번째는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고 해서 혐오 표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이는 논제에 대한 필자의 전체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이유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살펴보면, 먼저 최근 자주 사용되는 여러 용어들을 나열하면서 어느 선까지 혐오 표현으로 규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근거 제시로 판단된다.</p> <p>한편,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 가운데 국내 사례는 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로 보기는 어려워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해외의 사례를 함께 제시하는 등 대체로 효과적으로 주장에 대한 이유,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p>

③ 3점 사례: 이유나 근거 가운데 일부가 적절하지 않으나, 대체로 수용할 만함

답안 사례	<p><u>로봇세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u> 최근 뉴스를 보면 로봇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이 맡았던 일을 로봇이 대신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로봇 도입을 하는 기업의 입장으로는 로봇이 대신 일을 해줌으로써 인건비를 아낄 수 있고, 업무 실수가 없으며 일의 정확도가 높아 오차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업체 입장에서 보면 단점보단 장점이 더 많아서 로봇 도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p> <p><u>하지만 결코 이러한 로봇 도입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봇들이 어떤 분야에 대한 일을 하는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하니 그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u> 그 분야에 접근하려는 사람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려는 의욕이 떨어져서 직장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죠. <u>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로봇세 도입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로봇으로 이익을 얻는 업체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편차를 완화해야 불완전한 사회가 나아지기 때문이죠.</u> 로봇의 발달로 인해 줄어드는 일자리가 많아지지만 그에 반해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도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 쪽과 로봇이 대체할 수 없을 일들을 사람들이 맡아야 할 것입니다. 일을 구하려는 의지 없이 지원금만 받는 사람들이 많을 거니 사회나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적극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u>로봇세를 도입하지 않으면 경제가 급진적으로 악화하게 될 거고 나라의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업체가 로봇으로 인해 얻는 이익으로 편차를 줄이고자 현재 최저시급제도와 같이 로봇노동으로 경제적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로봇세 도입이 된다면 오히려 사회가 더 안정해지고 발전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u> 그러므로 로봇세 도입은 사람들과 사회를 위해 적극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해설	<p>윗글은 이유나 근거 가운데 일부가 적절하지 않으나, 대체로 수용할 만하다는 점에서 ‘내용 3’의 3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 먼저 서론의 밑줄 친 바와 같이, 필자는 로봇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유로 글에서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로봇으로 이익을 얻는 업체에 로봇세를 부과함으로써 그러한 사람들과의 “편차를 완화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이는 이유와 근거가 효과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제시 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대체로 수용할 만하다.</p> <p>그러나 글의 후반부에서는 단정적인 주장만 제시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드러나 있지 않아, 논리의 흐름이 다소 부자연스럽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p>

② 2점 사례: 이유와 근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설득력이 떨어짐

<p>답안 사례</p>	<p>우리 할머니는 너무 사랑스럽다. 부모는 아이들의 생계와 교육 생활 등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므로 아이들에게 주는 관심의 정도가 무한한 사랑을 기반으로 보살펴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다.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은 거리낌 없이 사랑만 주면 되는 구조를 가졌기에 우리가 할머니 집에 갔을 때 더욱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다. 부담감 없는 사랑 그건 달콤하다. 하지만 조금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노인들의 사랑을 제외한 <u>인지나, 행동 통제 이런 뇌 과학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노인들이 시도하는 운전은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의 불완전한 통제와 흔들리는 판단 기준을 가진 노인들이 도로에 나오는 것은 살인 미수에 가까운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노인들의 운전이 허가되기 위해서 생각한 바로는 인지 통제력에 대한 시험을 보는 행위가 가장 적절할 것 같다.</u> 일정 나이 이상의 노령 운전자는 시험을 무조건 보게 만들고 도로 위의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문제로 내서 그 순간순간의 판단력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다. 그 점수를 토대로 운전면허증에 새로운 표시를 발급하고 혹시나 운전하다가 법규를 어기거나 위험한 방식으로 운전을 해서 경찰한테 걸리고 그 표시가 없는 면허증을 가진 노령 운전자가 운전하고 있으면 법의 강도 높은 처벌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할머니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우리 할머니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분이시다. 하지만 이성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생각해보면 <u>언제든 칼을 내지를 수 있는 강도와 일상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가족에게는 안쓰러울 수도 있고 당사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무고한 시민이 노령 운전으로 다치고 죽는 것은 더욱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노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제한에 찬성한다.</u></p>
<p>해설</p>	<p>윗글은 주장에 대한 이유나 근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내용 3'의 2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 먼저, 필자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제한을 찬성하는 입장임을 밝히면서 “노인들이 도로에 나오는 것은 살인 미수에 가까운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에 대한 적절한 근거나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글의 전반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p> <p>또한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제든 칼을 내지를 수 있는 강도와 일상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무고한 시민이 노령 운전으로 다치고 죽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적절한 근거와 타당한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역시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p>

② 1점 사례: 이유와 근거가 대부분 적절하지 않아 설득력이 매우 낮음

<p>답안 사례</p>	<p>나는 로봇세 도입에 찬성한다. 일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보다 로봇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p> <p><u>우선 로봇이나 AI를 도입함으로써 병에 걸려서 침대에서 누워있지만 해야 하는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도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일을 할 수가 있다.</u> 실제로 얼마 전에 본 뉴스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원격으로 편의점에서 일하는 모습이 보도되어 있었다. 그 사람들은 편의점에 있는 계산대에 시점원으로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이런 로봇의 활용은 오히려 일하고도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p> <p><u>그리고 같은 편의점으로 예를 들면 로봇이 계산을 하면 상품을 정리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다른 업무에만 집중할 수도 있고 더 효율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u></p> <p>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 꼭 해야 하는 일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 필요한 일들이다. 심리상담을 로봇이 와 해도 도움이 안 될 거고 배우나 가수가 전부 다 버추얼이었다면 사람 안에 있는 감정들이 덜 표현될 것이다.</p> <p>그래서 나는 사람과 로봇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로봇이 함으로써 더 효율적이거나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일은 계속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보다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p> <p>그리고 그런 로봇이나 AI도 결국 처음에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일과 로봇이 서로 좋은 점을 인정하고 공유하면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p>
<p>해설</p>	<p>윗글은 이유나 근거가 대부분 적절하지 않아 설득력이 매우 낮으므로 '내용 3'의 1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 이 글은 '로봇세 도입'에 관한 필자의 입장을 제시한 글이라기보다는 로봇 도입과 활용 방안에 관해 논의한 글로 판단된다. 즉, 주장이 논제에 부합하지 않고 이에 따라 하위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모두 적절하지 않아 설득력이 매우 낮은 글로 평가할 수 있다.</p>

4 이유·근거의 충분성

하위 준거	4-1. 이유·근거의 충분성(주장 또는 하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이유나 근거가 충분한가?)
	4-2. 이유·근거의 전개 수준(이유나 근거의 아이디어를 깊이 있게 전개하는가?)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단락 안에 전체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두 개 이상일 수 있음 - 이유·근거를 몇 개 이상 제시해야 하는지는 글의 분량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 이유·근거가 주장과 긴밀히 연관되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더라도 그 관계를 독자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유·근거의 전개 수준의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여 1점 감점함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점) 주장에 대한 적절한 하위 주장(=주장의 이유)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하고, 각각의 하위 주장에 대한 적절한 이유나 근거를 깊이 있게 제시함 - (4점) 주장에 대한 적절한 하위 주장(=주장의 이유)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하고, 각각의 하위 주장에 대한 적절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함 - (3점) 주장에 대한 적절한 하위 주장(=주장의 이유)을 한 가지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이유나 근거를 비교적 깊이 있게 제시함 - (2점) 주장에 대한 적절한 하위 주장(=주장의 이유)을 한 가지 제시하였으나, 그에 대한 적절한 이유나 근거를 깊이 있게 제시하지 못함 - (1점) 주장에 대한 적절한 하위 주장(=주장의 이유)이 없음

이 채점 준거는 ‘내용 3’의 ‘이유·근거의 적절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합리적인 논증에서 적절하고 타당한 ‘이유와 근거’의 세트를 기준으로 할 때, 그 세트가 양적으로도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준거이다.

이 해설에 활용한 글쓰기 문항은 분량을 1,000자 내외로 한정된 점을 고려하여 ‘이유·근거의 충분성’의 기준을 두 개로 설정하였다. 두 가지 이상의 이유가 제시되고, 그 각각의 이유를 구체적 근거로 뒷받침하였다면, 그 논증은 일정 수준의 충실성과 풍부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하나의 이유에 대해 두세 가지 근거가 제시되는 경우나 단일 근거로 뒷받침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

➔ 이유·근거의 충분성 채점 사례

- ⑤ 5점 사례: 주장에 대한 적절한 하위 주장(=주장의 이유)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하고, 각각의 하위 주장에 대한 적절한 이유나 근거를 깊이 있게 제시함

<p>답안 사례</p>	<p>로봇세에 반대하는 이유는 <u>첫 번째로 로봇세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로봇의 범위와 형태는 다양하여 로봇세의 규정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 키오스크나 컴퓨터 프로그램, 모바일 뱅킹 등도 인간의 일을 대체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u> 과세 대상을 설정한다고 해도 기업들은 로봇세를 회피하기 위해 기준에서 약간 벗어나거나 기능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조세 부담을 회피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세금이 의미 있게 거둬질 수 없다.</p> <p><u>두 번째 이유는 로봇세가 성장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세계경제포럼에서는 AI가 8500만 개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대신 9700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할 것으로 보았다. 국내에서도 운송서비스, 음식점, 상품중개서비스 등의 일자리는 감소하지만 전체 일자리 수는 221만 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들은 현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만약 로봇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세금을 또 내게 되는 이중과세가 되어 기업에 자금 압박이 되어 기술발전과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u></p> <p><u>마지막 이유는 로봇세로 인한 기본소득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u> 로봇세를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는 로봇세를 거두어 기본소득의 재원 조달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u>그러나 기본소득 지급은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u> 로봇세를 부과해 얻은 돈을 재분배하는 과정은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유사하다. <u>2020년 5월 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축산물의 가격이 급격히 올랐는데, 이때 삼겹살 평균 가격은 22.2%나 상승했다. 이러한 경험에 미루어 봤을 때 로봇세를 통한 소득의 재분배가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될 것이다.</u> 또 기본소득은 복지병을 유발할 수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근로 의욕이 저하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p> <p>로봇세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로봇세가 공정한 경쟁을 보장, 대량 실직과 사회 계층의 고착화 방지를 근거로 제시한다. 먼저 세금 부과로 기업의 로봇 독점을 막는다면 로봇을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을 주고 로봇 사용을 회피하여 기업 발전이 저하될 수 있다. 기업이 로봇세에 부담을 느껴 원가를 낮출 기회를 포기하면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계층 유동성은 더욱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로봇세의 도입보다 기본생활 수준의 향상과 양질의 교육 제공이 계층 고착화를 막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p>
<p>해설</p>	<p>윗글은 주장에 대한 적절한 하위 주장(=주장의 이유)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하고, 각각의 하위 주장에 대한 적절한 이유나 근거를 깊이 있게 제시하였으므로, '내용 4'의 5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p> <p>필자는 로봇세에 반대하는 이유로 로봇세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과 로봇세가 기술 발전과 혁신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로봇세를 통한 기본소득은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각 하위 주장에 대해 구체적이면서도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하위 주장과 관련해서는 로봇세의 정의를 명확하게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함께 구체적인 근거로 로봇과 유사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 여타의 기기들과 프로그램(예: 키오스크 등)에 대해 언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두 번째, 세 번째 하위 주장에 대해서도 외부의 다양한 사례와 자료를 바탕으로 유추를 활용하는 등 아이디어를 깊이 있게 전개하였다.</p>

④ 4점 사례: 주장에 대한 적절한 하위 주장(=주장의 이유)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하고, 각각의 하위 주장에 대한 적절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함

<p>답안 사례</p>	<p>최근 몇 년간 ‘혐오’와 ‘혐오 표현’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혐오 표현이란 정당화될 수 없는 혐오 감정에 근거하여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 공개적으로 모욕, 비하, 멸시, 위협을 하거나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혐오 표현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어쩌면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는 중에 우리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가능할까? <u>나는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u> 우선 현재 한국 사회에서 ‘혐오 표현’이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을 특정하기 힘들다.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급식충’, ‘찜민이’, ‘결정 장애’와 같은 표현도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 <u>이런 표현들까지도 법적으로 규제하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넓어 자칫하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u></p> <p><u>다음으로, 국가가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고 해서 혐오 표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나치를 경험한 유럽 국가들은 인종적 혐오를 처벌하는 법률을 많이 도입하였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독일에는 혐오 표현을 폭넓게 규정해 처벌할 수 있는 형법(독일 형법 제130조)이 있고, 영국과 프랑스 등지에도 혐오 표현 규제법이 있다. 그러나 그런 제약들로 우익과 극우의 영향력이 줄어 들지는 않았다.</u> 또, 한국에서도 2021년 1월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시행되고 일부 우파들이 검찰로 송치된 적이 있지만 그 후에도 광주 항쟁에 대한 왜곡은 계속되고 있다.</p> <p>혐오 표현의 범위는 너무 광범위하고, 국가가 규제한다고 해서 혐오 표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혐오 표현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널리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방법이 법적 규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 캠페인, 사회 영역 내의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p>
<p>해설</p>	<p>윗글은 주장에 대한 적절한 하위 주장(=주장의 이유)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하고, 각각의 하위 주장에 대한 적절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였으므로, ‘내용 4’의 4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 먼저 서론에서 필자는 “나는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위 주장으로 첫째는 법적 규제의 범위가 넓어 “자칫하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둘째는 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를 통해 그러한 표현이 사라지는 것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이 두 가지 하위 주장은 모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p> <p>이와 함께 하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를 살펴보면, 첫 번째 하위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혐오 표현이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들을 예로 들었다. 두 번째 하위 주장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례를 제시하면서 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국내 사례는 역사적 사실 왜곡에 관한 내용이므로 다소 초점이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p>

❖ 3점 사례: 주장에 대한 적절한 하위 주장(=주장의 이유)을 한 가지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이유나 근거를 비교적 깊이 있게 제시함

<p>답안 사례</p>	<p>우리나라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고령 운전자도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늘고 있다. 최근 뉴스 기사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에서 7km가량 역주행한 차량이 경찰에 붙잡혔던 사건이 있었다. 이 운전자는 70대 노인인 것으로 치매 증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전북 순창 조합장 투표소에서는 무려 20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운전자도 마찬가지로 70대 노인임이 밝혀졌다. 이 외에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u>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연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u></p> <p><u>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은 인지기능 및 신체기능 저하로 인한 운전 조작 실수나 운전자 착오이다. 노화가 시작되면서 힘, 조정력, 반응 속도, 집중력, 시력, 청력이 서서히 감퇴하며 집중이 필요한 상황일 때 체력이 더 고갈되거나 쉽게 피로해질 수 있다. 프랑스 파리이공과대, 독일 뮌헨대, 네덜란드 에라스무스대 공동연구진이 미국 국립과학원회보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사람의 인지 능력은 35세에 정점을 찍고 이후 상당 기간 최고 수준을 유지하다 45세 이후에 서서히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인지능력이 감소하여 판단력이 흐려지면 교통사고의 비율이 증가할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연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u></p> <p><u>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5년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량 단독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의 30%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였다.</u>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고령운전자의 운전행태 분석 및 정책개발 연구’에서 노인 운전자는 급진로변경, 급추월, 급좌회전, 급우회전, 급유턴, 급출발 같은 위험운전행동 건수가 전체 운전자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p> <p>고령 운전자는 젊은 운전자에 비해 인지능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며 이로 인해 급추월, 급출발 등등 위험운전행동 발생률이 젊은 운전자보다 높다. 고령자들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고령자 운전면허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p>
<p>해설</p>	<p>윗글은 주장에 대한 적절한 하위 주장(=주장의 이유)을 한 가지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이유나 근거를 비교적 깊이 있게 제시하였으므로 ‘내용 4’의 3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 서론에서 필자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연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고령 운전자 면허 제한을 찬성하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대해 글의 중간 부분에서 밑줄 친 바와 같이 하위 주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인지기능 및 신체기능 저하로 인한 운전 조작 실수나 운전자 착오”를 지적하면서 노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p> <p>무엇보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국제 공동 연구 사례에 관한 내용과 함께 국내 한 기관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비교적 깊이 있게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였다. 요컨대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인지 능력의 감소로 인한 판단력 둔화의 문제와 더불어 위험 운전 행동의 발생률이 젊은 운전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따라서 이 글은 적절한 하위 주장 한 가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비교적 깊이 있게 이유나 근거를 들어 논지를 전개한 것으로 평가된다.</p>

- ② 2점 사례: 주장에 대한 적절한 하위 주장(=주장의 이유)을 한 가지 제시하였으나, 그에 대한 적절한 이유나 근거를 깊이 있게 제시하지 못함

<p>답안 사례</p>	<p><u>나는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를 찬성한다. 왜냐하면 혐오표현은 이미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소수자들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u> 몸이 불편한 분들 그리고 성소수자분들 또 외국인,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뒤에서 수군거리고 놀리는 사람들이 있다. 컴퓨터 게임을 하다 보면 사람들 간에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다. 그런 것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고 눈살이 찌푸려진다. 또한 얼굴이 까무잡잡한 사람들에게 흑인, 검둥이 등등 기분 나쁘게 놀리는 사람들도 있다. <u>이런 소수자들은 자신이 소수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닌데 뒤에서 놀리고 기분 나쁘게 말하면 소수자분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혐오표현을 규제 안 하고 놔두면 일반인들의 소수자들에게 혐오적인 발언을 더더욱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되고 그럼 소수자들은 더더욱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게 될 것이고 그럼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한다. 소수자들도 다 같은 사람인데 왜 불이익을 받고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u> 오히려 배려를 해야 되는 반면 소수자들을 조롱과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강력히 처벌하여야 한다. 인터넷은 익명성이 보장이 되어서 더더욱 말을 쉽게 하고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므로 인터넷과 같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소수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글이나 댓글을 쓰면 오프라인에서 했던 것보다 더 강력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u>나라에서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혐오표현을 처벌하면 사람들에게 대한 소수자들의 인식이 점점 개선되어가며 소수자들의 인권이 보장될 것이다.</u> 그러므로 오프라인에서 소수자분들에게 비난하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온라인에서 익명성을 빌미로 소수자를 비난하면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p>
<p>해설</p>	<p>윗글은 주장에 대한 적절한 하위 주장(=주장의 이유)을 한 가지 제시하였으나, 그에 대한 적절한 이유나 근거를 깊이 있게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내용 4’의 2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밑줄 친 바와 같이, “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를 찬성한다”라고 밝히며, 그 이유는 “혐오 표현은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소수자들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적절한 하위 주장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나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혐오 표현의 처벌을 통해 소수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음을 언급한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필자 개인의 느낌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적절한 하위 주장 한 가지를 제시하였지만, 깊이 있는 아이디어가 드러나 있지 않으며,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p>

② 1점 사례: 주장에 대한 적절한 하위 주장(=주장의 이유)이 없음

<p>답안 사례</p>	<p><u>나는 로봇세 도입에 찬성한다.</u> 일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보다 로봇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p> <p><u>우선 로봇이나 AI를 도입함으로써 병에 걸려서 침대에서 누워있지만 해야 하는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도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일을 할 수가 있다.</u> 실제로 얼마전에 본 뉴스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원격으로 편의점에서 일하는 모습이 보도되어 있었다. 그 사람들은 편의점에 있는 계산대에 시점원으로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이런 로봇의 활용은 오히려 일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p> <p>그리고 같은 <u>편의점으로 예를 들면 로봇이 계산을 하면 상품을 정리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다른 업무에만 집중할 수도 있고 더 효율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u></p> <p>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 꼭 해야 하는 일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 필요한 일들이다. 심리상담을 로봇이 와 해도 도움이 안 될 거고 배우나 가수가 전부 다 버추얼이었다면 사람 안에 있는 감정들이 덜 표현될 것이다.</p> <p>그래서 나는 사람과 로봇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로봇이 함으로써 더 효율적이거나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일은 계속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보다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p> <p>그리고 그런 로봇이나 AI도 결국 처음에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u>인간이 하는 일과 로봇이 서로 좋은 점을 인정하고 공유하면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u></p>
<p>해설</p>	<p>윗글은 주장에 대한 적절한 하위 주장(=주장의 이유)이 없으므로 '내용 4'의 1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 필자는 서론에서 "로봇세 도입에 찬성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밑줄 친 바와 같이, 두 가지 하위 주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논제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하위 주장이다. 해당 글에서는 로봇세 도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필자는 로봇이 우리 생활에 주는 '효용성' 측면에서 논지를 전개하였기 때문이다. 밑줄 친 바와 같이 로봇을 도입하면 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음을 언급한 부분이나, 로봇을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도 모두 부적절한 하위 주장이다.</p> <p>또한, 이러한 하위 주장을 통해 필자는 "인간이 하는 일과 로봇이 서로 좋은 점을 인정하고 공유하면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라고 글을 마무리하였는데, 이 역시 필자가 논지를 잘못 이해하고 전개하였음을 보여 준다.</p>

5 반론 고려 및 대응

하위 증거	5-1. 접근의 다양성(반론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졌는가?)
	5-2. 입장 고려의 수준(반론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를 깊이 있게 전개하는가?)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반이 명확하게 나뉘는 논제에서는 필자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존재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반론의 논거까지 적절하게 고려한 경우에 높은 점수를 부여함 * 반론이 존재할 수 있음을 구체적인 정보 없이 형식적으로만(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으나) 드러낸 경우 2점을 부여함 * 반론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된 경우 3점 이상 부여함(하위 단락 안에 반론의 형식으로 포함될 수도 있음) - 여러 주장이 나올 수 있는 복잡한 논제에서는 반론의 논거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반론의 존재와 그 내용만을 적절히 고려하였어도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점) 반론을 고려하고, 그 내용을 매우 깊이 있게 전개함 - (4점) 반론을 고려하고, 그 내용을 대체로 깊이 있게 전개함 - (3점) 반론을 고려하였으나,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전개하지 못함 - (2점) 반론이 존재할 수 있음에 대한 인식이 간접적으로 드러남 (예: 주장의 강도를 낮추거나 단정적이지 않은 표현 사용) - (1점) 반론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한 입장에 대해서만 단정적으로 언급함

‘반론 고려 및 대응’은 다른 생각을 가진 독자가 자신의 글을 읽으면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를 예상하고, 그 예상을 글에 잘 반영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증거이다. 즉, 상대가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반론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대응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반론에 대한 고려와 대응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될 수 있다. 필자가 자신의 입장에 반대되는 반론을 미리 요약적으로 제시하면서 반영할 수도 있고, 자신의 입장과 반대 입장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대조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더 우위에 있음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할 수도 있다. 또는 자신의 입장과는 다른 여러 가지의 입장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식으로 글을 전개할 수도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 증거의 하위 평가 요소로는 ‘접근의 다양성’과 ‘입장 고려의 수준’이 있다.

‘접근의 다양성’은 자신과 다른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였는지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부여할 수 있다. ‘입장 고려의 수준’은 비교하기나 논박하기 등과 같은 다양한 전개 방식을 활용하여 다른 입장을 다루었다면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령자 운전면허 제한’을 반대하는 경우, 찬성하는 사람이 필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질문들을 예상하여 답하는 식으로 제한된 분량 안에서 적절하게 반영하여 진술하였다면, ‘반론 고려 및 대응’은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 반론 고려 및 대응 채점 사례

⑤ 5점 사례: 반론을 고려하고, 그 내용을 매우 깊이 있게 전개함

<p>답안 사례</p>	<p>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지금, 우리 생활에선 많은 것들이 기계화되었다. 특히 로봇이 노동으로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로봇세를 지지하는 의견이 등장한 만큼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산업 발전의 저해를 우려하며 로봇세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로봇세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산업 발전 저해보다 더 큰 문제들이 생길 것이다. 로봇세는 도입되어야 한다.</p> <p>최근 가장 큰 사회문제는 청년들의 취업과 실업, 즉 일자리 문제이다. 이런 사회문제에 더하여 점차 AI가 일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로봇세 도입은 이 문제들을 완화해 줄 것이다. 로봇세는 세금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존 취업 문제에 더해 AI에 빼앗기는 직업들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복지에도 도움을 줘 경제에 좋은 선순환이 될 것이다. 일자리를 대체하는 로봇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생길 문제들을 대처하는 열쇠인 것이다.</p> <p>로봇세에 반대하는 측의 입장 중 하나는 산업발전의 저해이다. 이는 로봇세를 부과한다면 AI와 같은 기술, 산업 발전들이 주춤하며 저해된다는 것이다. 결국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도 뒤처져 국가 경제 상황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과학발전 측면에서만 고려한 주장이다. 로봇세를 도입하지 않고 AI들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대체하면 실업, 빈부격차 등 다양한 문제가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 경제 상황의 악화에 힘을 들여야 할 것이다. 오직 산업 발전을 위한다면 미래 성장을 위해 시작한 투자가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로봇으로 인력을 대체해 원래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아 로봇을 가진 자본가는 부를 쌓는 상황이 온다. 반대로 소유하지 못한 자본가, 로봇으로 인한 실업자는 가난해진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인 경제는 옳지 않다. 로봇세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국가의 빈곤층, 소외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세금의 용도로 쓰인다면 빈부격차도 약화할 수 있을 것이다.</p> <p>AI가 등장하며 피할 수 없는 로봇세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찬성 측은 AI의 문제들이 로봇세로 완화할 수 있으므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반대하는 입장은 이런 로봇세로 산업이 주춤하며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말한다. 하지만 발전만을 생각하기보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공생할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p>
<p>해설</p>	<p>윗글은 반론을 고려하고, 그 내용을 매우 깊이 있게 전개하였으므로 ‘내용 5’의 5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 필자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 상대가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반대 입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입장에 대해서도 두루 고려하여 글을 전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밑줄 친 바와 같이,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로봇세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다양한 입장이 존재할 수 있음을 구체적인 정보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다른 입장을 고려하면서 아이디어를 깊이 있게 전개한 후 필자는 다시 “이는 단순히 과학 발전의 측면에서만 고려한 주장”임을 언급하며 반론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반박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p>

④ 4점 사례: 반론을 고려하고, 그 내용을 대체로 깊이 있게 전개함

<p>답안 사례</p>	<p>나이가 들면 신체적 노화로 인해 각종 능력 등이 감소하고, 이는 운전 중 사고 위험 증가에 큰 영향을 준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와 관련해 조사한 기사에 첨부된 가해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현황 그래프를 보면 고령 운전자는 다른 연령대의 운전자들보다 교통사고 유발률, 각 사고에 해당하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의 고령화라는 사회 현상으로 인해 총인구 중에 고령자의 인구 비율이 점차로 많아지고, 이와 더불어 고령 운전자 증가 폭도 점점 더 커져 앞으로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제한에 대한 대안도 하루빨리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p> <p>하지만, 위의 사례만 가지고 선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u>고령 운전자 중에는 주행 경험이 풍부하고, 안전 운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그들의 운전이 미숙할 것이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u> 또한 일부 지역이나 상황에서는 대중교통 수단이 제한적일 수 있는데 이러한 지역이나 상황에서 면허를 제한하게 된다면 해당 운전자들의 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제한은 그들의 사회 참여를 간접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고령 운전자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p> <p><u>어떤 상황에서도 적용되듯이 한쪽으로 너무 편향되지 않고, 각 대안의 이점을 잘 종합시켜 결론을 도출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노화에 따른 각종 능력의 감소가 운전 중 사고 위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점, 나이만으로 운전 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이 두 가지 점을 종합해 운전 능력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이 평가는 개별적으로 시행되면 될 것이다.</u> 나이에 따른 사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의견이므로 이 내용을 토대로 <u>연령대별로 운전 평가 시행 주기를 조정하면 될 것이다.</u> 운전면허 제한으로 인해 도출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 활동 범위 제한 등의 부작용은 대중교통 개편, 경제적인 지원 등의 추가 대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결론지을 수 있는 주제는 아니겠지만, 여러 의견의 장단점을 서로 잘 상쇄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과정이 반복된다면 좋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p>
<p>해설</p>	<p>윗글은 반론을 고려하고, 그 내용을 대체로 깊이 있게 전개하였으므로 '내용 5'의 4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 서론에서 필자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제한에 대한 대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고령 운전자 중에는 주행 경험이 풍부하고, 안전 운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그들의 운전이 미숙할 것이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앞서 언급 하였던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제한하는 것에 관한 다른 입장을 고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p> <p>마지막 문단에서도 각 대안의 이점을 잘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밝히며, 각 주장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비교를 통한 논박의 과정을 세밀하게 제시하기보다는 다른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예시를 제시하는 선에서 내용을 전개하여 5점을 부여하기에는 그 내용의 깊이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p>

❖ 3점 사례: 반론을 고려하였으나,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전개하지 못함

<p>답안 사례</p>	<p>현재 한국 사회 안에서 혐오 표현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혐오 표현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이루는 특성에 관해 차별적이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는 것이다.</p> <p>과거에는 인종, 장애인, 성 소수자 등에 관해 주로 가해졌다면, 요즘에는 성별, 지역, 정당 간에도 혐오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사람들에게 벌레 충(蟲) 자를 붙여 비하하거나 조직적으로 혐오를 위한 사이트까지 생성되고 있는 등 점점 심각해지는 사태를 보여준다. 유의선,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한 일 고찰-규제옹호론과 규제제한론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2019, 194쪽</p> <p>혐오 표현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내지 적의의 표현으로 개개인이 쉽게 바꿀 수 있는 특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집단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혐오 표현은 피해자로서는 벗어날 수 없고 결국 피해자의 인격 자체를 침해할 수도 있는 성격을 가진다. 예를 들어 천부적 특성으로, 바꿀 수 없는 인종이나 성별에 대한 것을 들 수 있다.</p> <p><u>이렇게 혐오 표현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인데, 바로 표현의 자유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다.</u>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 헌법에 명시된 자유주의와 직결된 것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권리 중 하나로 꼽힌다. 이와 대립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평등권과 관련된 개념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현행법상 혐오 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지만 혐오 표현에 대한 개념 정리가 명확하지 않아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혐오 표현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정의 및 규제가 존재하지 않고 여성, 남성, 장애인 등에 따른 개별 법률만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혐오 표현 규제를 논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고 조심스러워 혼란을 야기하기 쉽다. <u>따라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논하기 전에 법적 정의의 확립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u></p>
<p>해설</p>	<p>윗글은 반론을 고려하였으나,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전개하지 못하였으므로 ‘내용 5’의 3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 중간 부분의 밑줄 친 바와 같이, “혐오 표현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을 언급한 후, 이어서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서로 다른 입장을 고려한 것은 확인된다.</p> <p>그러나 반론에 대한 접근이 다양하게 기술되지 않았고, 그러한 입장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를 깊이 있게 전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표현의 자유”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러한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분의 밑줄 친 바와 같이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논하기 전에 법적 정의의 확립이 우선”이라고 기술함으로써 오히려 필자의 주장이 약화되었고, 자연스럽게 반론에 대한 고려 역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확인된다.</p>

❖ 2점 사례: 반론이 존재할 수 있음에 대한 인식이 간접적으로 드러남

(예: 주장의 강도를 낮추거나 단정적이지 않은 표현 사용)

<p>답안 사례</p>	<p>최근 로봇의 발달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사람들의 일자리는 이미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길거리를 걸어나다 보면 음식점에서 사람이 아닌 로봇이 음식을 서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카페에서 로봇이 음료를 만들어주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따라서 나는 로봇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 <p>우선, 로봇세를 도입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u>사람들은 일자리가 감소하는 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로봇으로 대체될 일자리의 종류라고 생각한다.</u> 로봇은 인간과 달리 하루 종일 일할 수 있고 지치지 않기 때문에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에 로봇이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는 로봇을 관리하는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으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존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직업을 다시 구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재취업할 때까지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 <p>두 번째로, 주로 사람 대신 로봇을 고용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로봇으로 인해 실직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돈이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빈부격차가 더 심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로봇세를 도입하여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로봇의 도입으로 인해 실직된 사람들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p> <p>로봇이 발달하면서 더 효율적이고 이윤을 더 남기게 되겠지만 그로 인해 어려워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로봇세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p>
<p>해설</p>	<p>윗글은 반론이 존재할 수 있음에 대한 인식이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으므로, ‘내용 5’의 2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 서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필자는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하면서 로봇세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런데 중간 부분의 밑줄 친 바와 같이, “사람들은 일자리가 감소하는 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지만”이라고 하여 로봇세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의견에 대한 간접적 인식을 드러내며 주장의 강도를 낮추고 있다. 그러나 이어서 필자는 “중요한 점은 로봇으로 대체될 일자리의 종류”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다시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며 내용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다른 입장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의견에 대한 인식의 일부를 드러내면서 주장의 강도를 낮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p>

❖ 1점 사례: 반론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한 입장에 대해서만 단정적으로 언급함

<p>답안 사례</p>	<p>우리나라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고령 운전자도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늘고 있다. 최근 뉴스 기사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에서 7km가량 역주행한 차량이 경찰에 붙잡혔던 사건이 있었다. 이 운전자는 70대 노인으로 치매 증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전북 순창 조합장 투표소에서는 무려 20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운전자도 마찬가지로 70대 노인임이 밝혀졌다. 이 외에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연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p> <p>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은 인지기능 및 신체기능 저하로 인한 운전 조작 실수나 운전자 착오이다. 노화가 시작되면서 힘, 조정력, 반응 속도, 집중력, 시력, 청력이 서서히 감퇴하며 집중이 필요한 상황일 때 체력이 더 고갈되거나 쉽게 피로해질 수 있다. 프랑스 파리이공과대, 독일 뮌헨대, 네덜란드 에라스무스대 공동연구진이 미국 국립과학원회보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사람의 인지 능력은 35세에 정점을 찍고 이후 상당 기간 최고 수준을 유지하다 45세 이후에 서서히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인지능력이 감소하여 판단력이 흐려지면 교통사고의 비율이 증가할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연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p> <p>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5년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량 단독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의 30%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였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고령운전자의 운전행태 분석 및 정책개발 연구’에서 노인 운전자는 급진로변경, 급추월, 급좌회전, 급우회전, 급유턴, 급출발 같은 위험운전행동 건수가 전체 운전자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p> <p>고령 운전자는 젊은 운전자에 비해 인지능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며 이로 인해 급추월, 급출발 등등 위험운전행동 발생률이 젊은 운전자보다 높다. 고령자들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고령자 운전면허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p>
<p>해설</p>	<p>윗글은 반론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한 입장에 대해서만 단정적으로 언급하였으므로 ‘내용 5’의 1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 밑줄 친 바와 같이, 필자는 서론, 본론, 결론에 이르기까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만 제시하였을 뿐, 반론이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한 흔적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p>



조 직

6. 글 전체 조직

7. 문단 내 조직

6 글 전체 조직

하위 준거	6-1. 문단 구분의 적절성(서-본-결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6-2. 문단 배열의 유기성(문단 배열이 유기적이고 자연스러운가?)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 전체의 흐름이 대체로 자연스러우나 형식 문단이 적절히 나뉘지 않은 경우 3점을 부여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점 이하를 부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론에서 제시한 글의 주제가 실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서론 없이 논증을 바로 시작하거나, 주장과 근거를 제시한 뒤 마무리 없이 글을 끝낸 경우 * 결론에서 본론의 내용을 부정확하게 요약하거나, 본론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제시한 경우 * 서론-본론-결론의 순서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점) 형식 문단과 내용 문단 모두에서 서-본-결의 구조가 매우 적절하게 구분되고, 문단 배열이 매우 유기적임 - (4점) 형식 문단과 내용 문단 모두에서 서-본-결의 구조가 대체로 적절하게 구분되고, 문단 배열이 대체로 유기적임 - (3점) 형식 문단 또는 내용 문단의 구분과 배열이 일부 자연스럽지 않으나, 글을 읽는 데 크게 방해가 되지 않음 - (2점) 글의 체계가 다소 부족하여 완성도가 낮고, 문단 배열이 많이 부자연스러움 - (1점) 내용 문단이 거의 구분되지 않아, 글의 체계가 없음

‘조직’은 글을 이루는 내용들 간의 연결이 자연스럽고 유기적이며 응집성이 있는가를 의미한다. 글의 조직은 크게 거시 조직과 미시 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거시 조직은 글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지와 관련되고, 미시 조직은 문단 내의 응집성이나 유기성이 확보되어 있는지와 관련된다.

‘조직 1’에 해당하는 ‘글 전체 조직’은 ‘서론-본론-결론’의 구조가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문단 간 연결 관계가 적절한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서론’은 논증을 전개해야 할 배경이나 필요성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문단이고, ‘본론’은 필자가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문단이다. ‘결론’은 앞서 논증한 내용을 정리하며 필자의 주장을 다시 강조하거나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는 문단이다.

줄 바꿈을 통해 문단 구분이 되는 ‘형식 문단’과 각 문단 내의 내용적인 완결성과 통일성이 충족된 ‘내용 문단’이 글 전체에 갖추어져야 ‘글 전체 조직’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더라도 형식 문단의 구분이나 제시가 부적절하다면 평균 수준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 글 전체 조직 채점 사례

- ⑤ 5점 사례: 형식 문단과 내용 문단 모두에서 서-본-결의 구조가 매우 적절하게 구분되고, 문단 배열이 매우 유기적임

<p>답안 사례</p>	<p>지난 3월, 70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제동 장치로 오인해 사고를 냈다. 1월에는 60대 운전자, 지난해 8월에는 80대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 <u>세 사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운전자가 모두 60세 이상의 고령인이라는 것이다.</u> 통계청의 가해자 연령층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2021년에 전년 대비 다른 연령층은 교통사고가 감소했지만 60세 이상은 모두 증가했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점점 증가하면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 <u>나는 이 제도에 반대한다.</u></p> <p><u>반대하는 이유는 2가지이다. 첫째,</u> 누구나 돌발 상황 대처에 미숙할 수 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의 가장 주된 이유는 나이가 들면 사고 대처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초보 운전자 또한 그렇다. 초보 운전자는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단순히 넘기면서 고령 운전자에게는 면허를 반납하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u>둘째, 고령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u> 현재 서울시에서는 면허 반납 시 10만 원이 충전되어 있는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그러나 평생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10만 원은 부족한 금액이다. 물가 상승으로 교통비가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면허 반납은 고령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p> <p>그렇다면 <u>다른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사고 대처 교육 의무화가 있다.</u> 현재 고령 운전자의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며 면허 반납을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사고 상황을 두고 일정 연령 이상의 운전자에게 의무 교육을 시행하면 된다. 단순히 강의식이 아닌 실제로 체험하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행하면 면허를 반납하지 않아도 사고율을 줄일 수 있다. <u>둘째, 면허 반납을 지속하면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u> 서울시의 경우처럼 10만 원만을 지원하는 것은 부족한 금액이다. 따라서 지원금을 높이거나 달마다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p> <p>면허 반납 찬성 측은 고령 운전자의 판단 능력이 저하되기에 면허 반납이 필요하다고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초보 운전자도 마찬가지이며, 면허를 반납한다면 고령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일정 연령 이상의 운전자에게 사고 대처 교육을 의무화하거나 면허를 반납한다면 교통비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p>
<p>해설</p>	<p>윗글은 형식 문단과 내용 문단이 일치하며, 그 흐름 또한 서-본-결의 구조가 정확히 구분되고, 문단 배열도 매우 유기적이어서 ‘조직 1’의 5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p> <p>서론에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증가 실태’를 통해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본론에서는 두 문단에 걸쳐 자신의 주장의 이유와 근거 두 가지와 제도 보안을 위한 대안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반론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재차 강조하는 흐름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이런 내용상의 흐름과 형식 문단의 구분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p>

④ 4점 사례: 형식 문단과 내용 문단 모두에서 서-본-결의 구조가 대체로 적절하게 구분되고, 문단 배열이 대체로 유기적임

<p>답안 사례</p>	<p>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지금, 우리 생활에선 많은 것들이 기계화되었다. <u>특히 로봇이 노동으로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로봇세를 지지하는 의견이 등장한 만큼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u> 산업 발전의 저해를 우려하며 로봇세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로봇세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산업 발전 저해보다 더 큰 문제들이 생길 것이다. <u>로봇세는 도입되어야 한다.</u></p> <p>최근 가장 큰 사회 문제는 청년들의 취업과 실업, 즉 일자리 문제이다. 이런 사회 문제에 더하여 점차 AI가 일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로봇세 도입은 이 문제들을 완화해 줄 것이다. <u>로봇세는 세금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u> 기존 취업 문제에 더해 AI에 빼앗기는 직업들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u>그리고 복지에도 도움을 줘 경제에 좋은 선순환이 될 것이다.</u> 일자리를 대체하는 로봇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생길 문제들을 대처하는 열쇠인 것이다.</p> <p><u>로봇세에 반대하는 측의 입장 중 하나는 산업발전의 저해이다.</u> 이는 로봇세를 부과한다면 AI와 같은 기술, 산업 발전들이 주춤하며 저해된다는 것이다. 결국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도 뒤처져 국가 경제 상황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과학발전 측면에서만 고려한 주장이다. 로봇세를 도입하지 않고 AI들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대체하면, 실업, 빈부격차 등 다양한 문제가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 경제 상황의 악화에 힘을 더해야 할 것이다. 오직 산업 발전을 위한다면 미래 성장을 위해 시작한 투자가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로봇으로 인력을 대체해 원래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아 로봇을 가진 자본가는 부를 쌓는 상황이 온다. 반대로 소유하지 못한 자본가, 로봇으로 인한 실업자는 가난해진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인 경제는 옳지 않다. 로봇세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국가의 빈곤층, 소외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세금의 용도로 쓰인다면 빈부격차도 약화할 수 있을 것이다.</p> <p>AI가 등장하며 피할 수 없는 로봇세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찬성 측은 AI의 문제들이 로봇세로 완화할 수 있으므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반대하는 입장은 이런 로봇세로 산업이 주춤하며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말한다. <u>하지만 발전만을 생각하기보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공생할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u></p>
<p>해설</p>	<p>윗글은 형식 문단과 내용 문단 모두에서 서-본-결의 구조가 대체로 적절하게 구분되고, 문단 배열이 대체로 유기적이어서 ‘조직 1’의 4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p> <p>서론에서는 ‘로봇세 부과’에 관한 문제 상황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로봇세 도입’에 대한 찬성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본론에서는 두 문단에 걸쳐 자신의 주장의 이유와 근거, 그리고 다른 입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결론에서는 ‘로봇세 도입’에 관해 상반된 의견이 있음을 재차 언급하면서 앞으로의 기대를 제시하였는데, 본론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재차 강조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었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인다.</p>

❖ 3점 사례: 형식 문단 또는 내용 문단의 구분과 배열이 일부 자연스럽지 않으나, 글을 읽는 데 크게 방해가 되지 않음

<p>답안 사례</p>	<p>최근 몇 년간 ‘혐오’와 ‘혐오 표현’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혐오 표현이란 정당화될 수 없는 혐오 감정에 근거하여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 공개적으로 모욕, 비하, 멸시, 위협을 하거나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혐오 표현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어쩌면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는 중에 우리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u>이러한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가능할까? 나는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현재 한국 사회에서 ‘혐오 표현’이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을 특정하기 힘들다.</u>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급식충’, ‘잼민이’, ‘결정 장애’와 같은 표현도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 이런 표현들까지도 법적으로 규제하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넓어 자칫하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p> <p>다음으로, 국가가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고 해서 혐오 표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나치를 경험한 유럽 국가들은 인종적 혐오를 처벌하는 법률을 많이 도입하였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독일에는 혐오 표현을 폭넓게 규정해 처벌할 수 있는 형법(독일 형법 제130조)이 있고, 영국과 프랑스 등지에도 혐오 표현 규제법이 있다. 그러나 그런 제약들로 우익과 극우의 영향력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또, 한국에서도 2021년 1월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시행되고 일부 우파들이 검찰로 송치된 적이 있지만 그 후에도 광주 항쟁에 대한 왜곡은 계속되고 있다.</p> <p>혐오 표현의 범위는 너무 광범위하고, 국가가 규제한다고 해서 혐오 표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혐오 표현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널리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방법이 법적 규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 캠페인, 사회 영역 내의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p>
<p>해설</p>	<p>윗글은 서론과 본론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하나의 형식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문단의 배열이 일부 자연스럽지 않으나 글을 읽는 데 크게 방해가 되지는 않아 ‘조직 1’의 3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 서론에 해당하는 첫 문단의 밑줄 친 부분은 내용상 본론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첫 문단이 상대적으로 길어지면서 전체적인 균형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p>

② 2점 사례: 글의 체계가 다소 부족하여 완성도가 낮고, 문단 배열이 많이 부자연스러움

<p>답안 사례</p>	<p>로봇세란 말 그대로 로봇의 노동으로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로봇세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로봇이 내는 세금을 고령자 직업교육, 학교 학종 등 복지에 활용할 수 있고, 로봇도 인격이 있다고 얘기했다. <u>그리고 과학 발전으로 로봇도 발전하고 있는데, 로봇으로 대체되는 직업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피해도 있을 것이며 이를 어느 정도 해결할 방안이 로봇세라는 주장이다.</u> 또 미래에는 더 많을 것이고 부익부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미래에 더 개발이 된다면 과학 관련 직업은 더 많은 돈을 보게 대지만 그렇지 않은 고령자, 주부, 취업난에 있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될 수 있다. <u>로봇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이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취업의 기회를 잃게 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자유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u> <u>그리고 로봇세 도입에 대한 반대의 입장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로봇이라고 규정하기가 애매하다고 얘기한다.</u> 우리는 현재도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동화 기기, 스마트폰, 스마트 웨어러블 등 다양한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p> <p>우리는 무감각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만약 스마트폰, 스마트웨어에도 로봇세를 받을 것인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기기에만 받을 것인지, 따로 그렇다면 도입이 돼도 많은 문제가 생겨날 것이고, <u>로봇세에 대한 논쟁은 끝이 없을 것이다.</u> 그리고 로봇 산업은 인간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u>로봇이 발달된다면, 인간이 하기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그런 일들은 일들로부터 해방되어 인간 삶의 수준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u></p> <p><u>그러므로 인간은 로봇 산업에 대한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 나의 의견은 로봇세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나는 처음에 주제를 봤을 때는 당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는데 검색해보고 찾아보니 내 생각과 다른 생각도 많은 것 같다.</u> 처음엔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 취업하기 어려운 고령자, 주부, 학생들은 로봇을 사기에도 부담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으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게 생길 것 같다. 하지만 로봇세를 도입함으로써 세금을 받아 직업 교육, 학교 학종 등등 복지와 혜택을 많이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환경만 내가 생각하는 로봇세 도입 후의 문제점은 로봇세를 내지 않기 위한 <u>기업들의 비리나 불법 기계나 신고되어 있지 않는 기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끝</u></p>
<p>해설</p>	<p>윗글은 글의 체계가 다소 부족하여 완성도가 낮고, 문단 배열이 많이 부자연스러워 '조직 1'의 2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세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서-본-결의 구조를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상의 흐름과 무관하게 임의로 구분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p> <p>글 전체의 내용상 흐름도 체계적이지 않다. 글 전체 내용은 '로봇세 도입의 취지-다양한 기계를 사용하는 현대 사회-로봇세에 대한 논쟁-로봇 발달로 인한 편의성-필자의 주장(로봇세 도입 찬성)-로봇세를 피하려는 불법 행위 우려'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필자의 주장이 글 중간에 등장하여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로봇세 및 로봇의 도입에 관한 상반된 입장이 섞여 있어 글 전체의 흐름 또한 일관되지 않는다.</p>

② 1점 사례: 내용 문단이 거의 구분되지 않아, 글의 체계가 없음

<p>답안 사례</p>	<p><u>현대사회에 들어서 사람들에게겐 스마트폰이 필수품이 되었다.</u> 당장 밖에 나가 봐도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이 수도룩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19년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에 따르면 2012년, 23.5%에 미치던 SNS 사용률은 2019년 44.7%로 상승하였다. 이처럼 유행의 중심인 SNS는 익명성이 보장되며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u>단점으로는 정체되지 못한 표현들이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된다는 것이다.</u> 이에 대해 우리 사회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u>따라서 나는 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를 찬성하는 바이다.</u></p> <p><u>청소년이 혐오 표현을 접하는 시기를 늦추기 위한 인터넷과 연관된 대책과 방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u> 아직 정서 발달이 완전하지 않고 일탈적인 하위 문화를 공유하는 청소년들에게 혐오 표현이라는 자극적인 소재가 주어진다면 이를 통한 재미를 추구하거나, 잘못된 인식 왜곡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피해를 입은 이유로는 자신이 가진 약점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피해 이후에 자퇴를 고민하거나 스트레스로 잔병치레를 한 경험을 갖고 있음. 혐오 표현은 그 자체로 언어폭력이고 학교 폭력일 뿐 아니라 대부분 왕따를 경험했고, 성소수자의 경우 아웃팅 피해를 보기도 했음.] <u>이 글은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6,000명을 대상으로 혐오 실태 분석과 전문가 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 실제 피해 학생의 사례를 간략한 것이다.</u></p> <p>이렇게 혐오 표현은 사회적인 문제임에도 사실상 <u>법적 규제가 어렵다.</u> 그 이유는 혐오 표현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p> <p>만일 이를 법적으로 규제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여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해 본다. <u>첫째, 행위자가 행한 혐오 표현의 의미를 자신이 알고 있는가? 둘째, 해당 행위로 청자 혹은 차별 대상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봤는가?</u> 등등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인터넷, 특히 SNS 사용 일부 기능을 제한하거나, 혐오 가해자를 사법 처벌하는 것. 혹은 혐오 표현에 대한 문제 인식을 기르기 위해 예방 교육을 시행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 생각한다.</p>
<p>해설</p>	<p>윗글은 내용 문단과 형식 문단이 불일치하고, 형식 문단의 길이가 불균형해서 내용과 관계없이 임의로 문단을 나눈 것으로 보인다. 서-본-결 각각에서 다룬 내용이 뒤섞여 있어 글 전체적으로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 '조직 1'의 1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p> <p>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글은 '스마트 기기의 유행-청소년 언어문화에 부정적 영향-필자의 주장(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 찬성)-청소년의 혐오 표현 피해 사례-법적 규제의 어려움-법적 규제 시 고려 조건'의 흐름을 보이는데 앞에 기술한 내용이 뒤에 나오는 주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청소년 언어문화와 혐오 표현의 규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p>

7 문단 내 조직

하위 준거	7-1. 완결성(뒷받침 문장을 사용하여 문단의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였는가?)
	7-2. 통일성(문단별로 하나의 중심 생각이 전개되는가?)
	7-3. 일관성(문단을 이루는 여러 문장들이 서로 긴밀한 관계로 연결되는가?)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에서 요구하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는지 여부 및 주장과 논거의 적절성은 평가하지 않음 - 형식 문단을 기준으로 채점하되, 형식 문단은 구별되지 않지만 내용 문단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내용 문단을 기준으로 각 구성 요건을 판단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글 전체가 한 문단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2점 이하를 부여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각 사례마다 1점씩 감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단 내에 소주제에서 벗어난 문장이 있는 경우 * 문단 내 문장의 배열이 부적절하여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경우 * 문장 사이에 부적절한 접속 표현이 사용되어 문장 간의 연결을 방해하는 경우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점) 모든 문단에서 완결성, 통일성, 일관성을 갖춘 - (4점) 대부분의 문단에서 완결성, 통일성, 일관성을 갖춘 - (3점) 일부 문단에서 완결성, 통일성, 일관성을 갖춘 - (2점) 문단의 완결성, 통일성, 일관성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완성도가 낮음 - (1점) 대부분의 문단에서 완결성, 통일성, 일관성을 갖추지 못함

‘조직 2’에 해당하는 ‘문단 내 조직’의 경우 하나의 문단을 기준으로 할 때, 그 문단 내의 구조 요소 세 가지를 중심으로 평가하게 되는 준거이다. 이는 ‘완결성’, ‘통일성’, ‘일관성’으로 구성된다.

‘완결성’은 뒷받침 문장을 사용하여 문단의 중심 생각을 뒷받침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이다. 예를 들어,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의 글에서 한 문단의 중심 생각이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반납 등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면, 그러한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나 효과성이 함께 제시되어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해당 문단을 완결성을 갖춘 문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통일성’은 문단별로 하나의 중심 생각이 전개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요소이다. 예를 들어,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제한해야 한다’라는 입장의 글에서 한 문단의 전반부에서는 ‘개인의 인지 능력 저하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기술하고 후반부에서는

‘특정 연령이 되면 면허증을 반납하게 해야 한다’라고 기술하였다면, 두 문장의 내용이 서로 배치되어 해당 문단은 통일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일관성’은 문단을 이루는 여러 문장들이 서로 긴밀한 관계로 연결되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이다. 예를 들어,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제한을 찬성하는 근거로 고령 운전자의 사고 사례를 제시하는 상황에서, 해당 사고가 발생한 시간적 흐름이나 인과 관계와 상관없이 흐름을 뒤섞어 제시하였다면 그 문단은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 문단 내 조직 채점 사례

⑤ 5점 사례: 모든 문단에서 완결성, 통일성, 일관성을 갖춘

<p>답안 사례</p>	<p><u>로봇이 낯설고 생소하기만 했던 과거와는 달리,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제 로봇은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가 되었다.</u> 로봇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에는 인간이 했던 일을 로봇이 대체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인간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문제가 생겼다. 사람들은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로봇의 노동으로 생산하는 <u>경제 가치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 세금이 바로 ‘로봇세’이다.</u></p> <p><u>나는 로봇세 도입에 찬성한다. 그 첫 번째 근거는, 로봇세를 도입함으로써 인간의 일자리를 로봇이 무분별하게 대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u> 로봇의 노동에 아무런 세금도 부과하지 않고 이를 방임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인간을 고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을 고용하는 것보다 로봇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소수의 고용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발도 들이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p> <p><u>두 번째 근거는, 로봇세 도입이 오히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u> 로봇세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로봇세를 도입하는 것이 로봇 기술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자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로봇세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의 불만과 실질적인 피해를 간과한 것이다. 로봇세 부과 없이 로봇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로봇에 대한 반감을 가져올 것이다. 로봇세 도입으로 정당한 대가를 치르며 로봇을 노동에 이용한다면, 로봇을 무작정 반대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고 로봇 기술은 사람들의 부정적 반응 없이 발전을 거듭할 수 있을 것이다.</p> <p><u>마지막 근거는, 로봇세를 도입함으로써 국가도 정당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u> 지금까지 사람이 생산한 경제 가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만약 로봇이 대부분의 노동을 담당하는데 그에 대한 세금은 걷을 수 없다면, 국가 입장에서 이는 엄청난 손해이고 국가의 발전이 저해될 것이다. 로봇세로 정당한 세수를 확보하면 이것이 국가 발전의 밑거름으로 쓰여 선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p> <p><u>지금까지 설명한 근거를 토대로 나는 로봇세 도입에 찬성한다.</u> 과학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우리는 이제 로봇과 같은 과학기술의 산물과 공생해야 한다. <u>로봇세 도입은 단순히 로봇에 대한 반감으로 로봇을 거부하려는 것이 아닌, 로봇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생의 방안이다.</u></p>
<p>해설</p>	<p>윗글은 모든 문단에서 완결성, 통일성, 일관성을 갖추었으므로 ‘조직 2’의 5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 형식 문단이 명료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각 문단별로 하나의 중심 내용을 드러내고 있어 통일성을 갖추었다. 각각의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문장이 문단별로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어 완결성도 갖추었다. 또한, 각 문단 내에서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 논리적으로 재반론하고, 기대되는 효과를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문단 내 일관성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p>

④ 4점 사례: 대부분의 문단에서 완결성, 통일성, 일관성을 갖춘

<p>답안 사례</p>	<p><u>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에 대한 찬반은 최근 이슈이다.</u>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매달 2,000여 건씩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노인인 경우가 23%에 달하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고령자의 면허 반납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고령자들의 운전면허 소지 비율이 커지는 추세에서 면허 반납은 적합한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u>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을 반대하며 더 적합한 대책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u></p> <p>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2018년도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98만 9,976명이며, 2028년도에는 추정 810만 9,245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점차 증가하는 운전자에 대응하여 면허 반납을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커진다. 더불어 면허를 반납하여 이동권을 포기하는 대가에 대한 혜택이 적고, 교통의 수단이 부족해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서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는 꼭 필요하기에 반발이 심하다. 현재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2021년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중 자진 반납 비율은 2%에 불과하다. <u>제도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보상이 약함을 근거로 들어 반대한다.</u></p> <p><u>우리는 면허 반납은 시행하지 않으며 고령 운전자 사고율은 줄이는 대책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u> 현재 고령 운전자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직무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이 교육의 주기를 짧게 설정하고 운전자의 능력을 정기적으로 시험해야 한다. 더불어 발전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기술 발전을 이용하여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을 보조하는 대책이 있다는 것이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 저하로 인한 차선 이탈, 긴급 제동 시스템, 충돌 경고 시스템을 발전하는 것이다.</p> <p><u>따라서 면허 반납보다는 고령 운전자들을 위한 대책과 시스템의 발전을 도모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u></p>
<p>해설</p>	<p>윗글은 대부분의 문단에서 완결성, 통일성, 일관성을 갖추었으므로 '조직 2'의 4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 대체로 형식 문단이 잘 구분되어 있고, 문단별로 하나의 중심 내용을 보여 주고 있어 통일성을 갖추었다. 각각의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문장도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어 완결성도 갖추었다. 또한 각각의 문단이 문제 상황 제시와 주장, 반론, 재반론 및 대안 제시 등의 역할을 하며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마지막 문단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바로 앞 문단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한 것이어서 감점 요인이 된다.</p>

❖ 3점 사례: 일부 문단에서 완결성, 통일성, 일관성을 갖추

<p>답안 사례</p>	<p>혐오표현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혐오표현을 규제를 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모욕감을 주어서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혐오스러운 표현을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심으로 받아들여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옆에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듣기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하고 혐오표현으로 인해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 그리고 혐오스러운 표현을 하는 사람 자신은 의도적으로 장난스럽게 말로 한다거나 행동으로 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가 아닌 무심코 내 입에서 혐오적인 표현이 나오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내가 말한 것이 혐오표현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고칠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 <p>상대방의 입장으로 고려하고 생각해서 표현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은 멍청하다" 친구들끼리 장애 이런 표현이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이상이 있고 병을 앓고 있지만 같은 인간인데 위에서 말한 표현을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주제인 '고령 운전자 면허 제한에서 고령 운전자에게 운전 제한해야 한다' 역시 혐오표현이 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이 면허 제한을 받게 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를 해야 하는 동시에 우리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내가 상대방에게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내가 말하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혐오 표현인데도 인지를 못하고 계속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혐오표현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어야 하고 우리 사람들은 혐오표현이라는 것을 인지를 잘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내뱉고 있고 장난으로 삼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고치고 변화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하고 표현하자. 만약 내가 이미 무언가를 표현했더라도 내가 실수로 잘못 말한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p>
<p>해설</p>	<p>윗글은 첫 번째 문단이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완결성, 통일성, 일관성을 갖추어 '조직 2'의 3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 첫 번째 문단의 경우,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자신의 주장을 명시하면서 혐오 표현을 사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나열한 것은 긍정적이나, 이들이 단순 나열식으로 제시되어 완결성의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문단의 경우, 중심 내용과는 동떨어진 '고령 운전자 면허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중간에 제시하여 통일성을 떨어뜨렸고, '혐오 표현의 규제 여부'와는 결이 다른 내용으로 끝을 맺어 완결성과 일관성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p>

❶ 2점 사례: 문단의 완결성, 통일성, 일관성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완성도가 낮음

<p>답안 사례</p>	<p><u>로봇세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u> 최근 뉴스를 보면 로봇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이 맡았던 일을 로봇이 대신 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로봇 도입을 하는 업체의 입장으로는 로봇이 대신 일을 해줌으로써 인건비를 아낄 수 있고, 업무 실수가 없으며 일의 정확도가 높아 오차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업체 입장에서 보면 <u>단점보단 장점이 더 많아서 로봇 도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u></p> <p><u>하지만 결코 이러한 로봇 도입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u> 그뿐만 아니라 로봇들이 어떤 분야에 대한 일을 하는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하니 그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분야에 접근하려는 사람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려는 의욕이 떨어져서 직장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죠.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로봇세 도입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로봇으로 이익을 얻는 업체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편차를 완화해야 불완전한 사회가 나아지기 때문이죠.</p> <p><u>로봇의 발달로 인해 줄어드는 일자리가 많아지지만 그에 반해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도 생겨날 것입니다.</u> 그런 쪽과 로봇이 대체할 수 없을 일들을 사람들이 맡아야 할 것입니다. 일을 구하려는 의지 없이 지원금만 받는 사람들이 많을 거니 사회나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적극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u>로봇세를 도입하지 않으면 경제가 급진적으로 악화하게 될 거고 나라의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u> 업체가 로봇으로 인해 얻는 이익으로 편차를 줄이고자 현재 최저시급제도와 같이 로봇노동으로 경제적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로봇세 도입이 된다면 오히려 사회가 더 안정해지고 발전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봇세 도입은 사람들과 사회를 위해 적극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해설</p>	<p>윗글은 문단별로 중심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한 문단 내에서 관련 없는 내용이 여러 번 언급되거나 문장 간 논리적 연결이 드러나지 않아 문단의 완결성, 통일성, 일관성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므로 ‘조직 2’의 2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p> <p>첫째 문단에 제시된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필자의 핵심 주장인데, 이어지는 내용은 이를 뒷받침하는 문장이 아니라 앞에서 제시한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입장이나 상황과 관련되는 것이어서 완결성과 통일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문단에서는 밑줄 친 부분처럼 로봇이 노동 시장에서 활성화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자신의 주장만 반복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이 역시 완결성과 일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p>

② 1점 사례: 대부분의 문단에서 완결성, 통일성, 일관성을 갖추지 못함

<p>답안 사례</p>	<p>‘로봇세’라는 말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 들어 본 적이 있다. <u>요즘, 4차 산업 시대, 무인 시대 등 사람 대신 로봇이 일을 하는 시대가 온 수준을 넘어 지배하기 직전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이것과 항상 같이 등장하는 말이 ‘실업’이다.</u> 사람 대신에 로봇이 일을 하다 보니 그에 맞는 서비스직이 없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면 나는 ‘서비스직 대신 만드는 로봇이 등장하면 로봇 만드는 직업 외에는 남아 있는 직업은 전문직 그 정도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로봇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천지 차이이다. <u>인간은 노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 감정 등 부가적인 요소들이 많지만 로봇은 인간이 설정한 값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이 만들어지게 되면 인간의 할 일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로봇세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u> 경제적인 로테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대신하여 하는 노동도 노동으로 인정하여 수입으로 보고 사람과 동등하게 부과해야 한다. 지금 사람들이 수입을 하며 벌고 있는 돈의 일부를 내는 것이 세금이며, 이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도 있을 터인데, 로봇이 수입을 대신한다고 하여 수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로봇의 수입 중 일부는 ‘로봇세’라는 명목하에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u>또한 로봇이 사람을 대체함으로써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u> 어쩌면 로봇이 등장함으로써 로봇 하나가 사람 한 명이 일할 수 있는 분량보다 더 많이 할 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 <u>이를 대비하여 ‘로봇세’라는 명목하에 거둬들인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 같다.</u></p>
<p>해설</p>	<p>윗글은 하나의 문단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단 자체도 완결성, 통일성,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여 ‘조직 2’의 1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 중간에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주장을 상술하거나 뒷받침하는 내용이 전개되지 않았다. 주장의 이유나 근거로 ‘근로소득세’, ‘실업’ 등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논거들과 주장 간의 논리적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이마저 반복적으로 기술했을 뿐이어서 문단의 구성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p>

Ⅲ

표 현

8. 문장과 어휘

9. 어문 규범과 관습

8 문장과 어휘

하위 준거	8-1. 문장 표현의 자연스러움(문장 길이가 적절하고 그 표현이 자연스러운가?)
	8-2. 문장 표현의 효과성(문장의 의미가 명료하고 그 표현이 효과적인가?)
	8-3. 어휘 사용의 적절성(어휘 사용이 문맥에 맞는가?)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 길이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길이 자체보다는 의미 전달이 잘 되는지를 기준으로 함 - 다음과 같이 조사, 어미를 문법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감점함. 단, '반성은 커녕(→반성은커녕)', '했구(→했고)' 따위의 표기 오류는 여기에서 평가하지 않음 * '로서'와 '로써', '-든지'와 '-던지', '에'와 '의', '에'와 '에게' 등을 혼동한 경우 * '걸맞는(→걸맞은)', '만듬(→만들)'처럼 전성 어미를 잘못 쓴 경우 * '부터'와 '까지'처럼 짝을 이루는 조사를 제대로 호응시키지 않은 경우 *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에 따른 연결 어미를 잘못 쓴 경우 -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누락되었거나, 문장 성분이 서로 호응하지 않는 문장을 쓴 경우에는 감점함 - 언어 단위를 접속할 때 단어는 단어끼리, 구는 구끼리, 절은 절끼리 접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점함 - 문장의 중의성에 대한 판단은 문장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구조적 중의성, 수식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가 주로 해당)만 대상으로 하며, 동음이의어와 같은 단어 자체의 의미 때문에 발생하는 중의성은 고려하지 않음 - 같은 표현을 필요 이상으로 여러 번 사용하여 글이 어색하거나 단조롭게 느껴지게 하는 경우에는 감점하되, 해당 표현이 글의 주제어이거나 핵심 어휘에 해당하여 반복적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점하지 않음(예: 혐오 표현에 대한 글에서 '혐오'를 반복 사용하는 경우)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점) 문장과 어휘 사용이 자연스럽고 논증에 효과적임 - (4점) 문장이 대체로 자연스럽고 어휘 사용이 대부분 적절하나, 일부 문장과 어휘 사용은 논증에 효과적이지 않음(글 전체에서 어색한 문장과 어휘 사용이 두세 개 있음) - (3점)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과 부적절한 어휘가 사용되었으나,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크게 방해가 되지 않음(한 단락에 한두 개의 오류가 있음) - (2점)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과 부적절한 어휘가 사용되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됨(한 단락에 두 개 이상의 심각한 오류가 있음) - (1점) 문장 대부분이 부자연스럽고, 글의 맥락에 어울리지 않는 어휘가 많아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크게 방해가 됨

‘표현 1’에 해당하는 ‘문장과 어휘’는 어휘와 문장 수준에서 그것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표현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이다. 이는 크게 세 가지 하위 요소인 ‘문장 표현의 자연스러움’, ‘문장 표현의 효과성’, ‘어휘 사용의 적절성’으로 나뉜다.

‘문장 표현의 자연스러움’은 문장 성분들이 서로 잘 호응하는지를 중점적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는 요소이다. 예를 들어, 주술 호응 관계가 맞지 않아 문장이 어색하게 기술된 경우 효과적인 문장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

‘문장 표현의 효과성’은 문장 표현이 명료한지를 중점적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는 요소이다. 접속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거나, 내용을 지나치게 병렬적으로 열거하면 문장의 초점이 명료하지 않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표현의 효과성을 떨어뜨려 해당 요소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어휘 사용의 적절성’은 문맥에 걸맞은 어휘를 사용하였는지를 중점적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는 요소이다. 전문 분야의 어휘를 잘못 이해하여 문맥에 어울리지 않게 사용하거나, 한자어들을 병렬적으로 연결하여 만연하게 사용하는 경우 등을 어색한 어휘 사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요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 문장과 어휘 채점 사례

⑤ 5점 사례: 문장과 어휘 사용이 자연스럽고 논증에 효과적임

<p>답안 사례</p>	<p>지난 3월, 70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제동 장치로 오인해 사고를 냈다. 1월에는 60대 운전자, 지난해 8월에는 80대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 세 사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운전자가 모두 60세 이상의 고령인이라는 것이다. 통계청의 가해자 연령층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2021년에 전년 대비 다른 연령층은 교통사고가 감소했지만 60세 이상은 모두 증가했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점점 증가하면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 나는 이 제도에 반대한다.</p> <p>반대하는 이유는 2가지이다. 첫째, 누구나 돌발 상황 대처에 미숙할 수 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의 가장 주된 이유는 나이가 들면 사고 대처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초보 운전자 또한 그렇다. 초보 운전자는 '익숙해지면 관찮아질 것'이라고 단순히 넘기면서 고령 운전자에게는 면허를 반납하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고령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면허 반납 시 10만 원이 충전되어 있는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그러나 평생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10만 원은 부족한 금액이다. 물가 상승으로 교통비가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면허 반납은 고령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p> <p>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사고 대처 교육 의무화가 있다. 현재 고령 운전자의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며 면허 반납을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사고 상황을 두고 일정 연령 이상의 운전자에게 의무 교육을 시행하면 된다. 단순히 강의식이 아닌 실제로 체험하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행하면 면허를 반납하지 않아도 사고율을 줄일 수 있다. 둘째, 면허 반납을 지속하면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처럼 10만 원만을 지원하는 것은 부족한 금액이다. 따라서 지원금을 높이거나 달마다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p> <p>면허 반납 찬성 측은 고령 운전자의 판단 능력이 저하되기에 면허 반납이 필요하다고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초보 운전자도 마찬가지이며, 면허를 반납한다면 고령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일정 연령 이상의 운전자에게 사고 대처 교육을 의무화하거나 면허를 반납한다면 교통비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p>
<p>해설</p>	<p>윗글은 자연스럽고 논증에 효과적인 문장과 어휘를 사용하였으므로 '표현 1'의 5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p> <p>먼저 문장의 자연스러움 측면에서 보면, 모든 문장에서 문장 성분들 간의 호응이 매끄럽게 이루어져 감점 요소가 없다. 또한 문장 표현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모든 문장이 의미가 명료하여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p> <p>또한 어휘 사용의 측면에서도, 글 전반적으로 문맥에 맞는 어휘만을 사용하고 있어 자연스럽고 논증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p>

- ④ 4점 사례: 문장이 대체로 자연스럽고 어휘 사용이 대부분 적절하나, 일부 문장과 어휘 사용은 논증에 효과적이지 않음(글 전체에서 어색한 문장과 어휘 사용이 두세 개 있음)

<p>답안 사례</p>	<p>과학기술의 집약적인 발달로 인해 인간의 일자리는 대부분이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다. 심지어 로봇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오히려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수많은 실업자들이 생겨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먼저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봇세’의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한다. 간단하게 ‘로봇세’란 ‘로봇을 소유한 사람이나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을 의미한다. ‘로봇세’는 미래에 생겨날 실업자들을 대비하기 위한뿐만이 아닌 실업자 재교육 등의 지원 목적까지 고려하여 생겨났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예상하여 만든 의도와 다르게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필자는 이러한 ‘로봇세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p> <p>필자가 반대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빠르게 발전하는 로봇산업의 기대가 저하된다. 아직 완벽히 개발도 되지 않은 로봇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로봇 개발자에게는 세금 이상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세금은 곧 비용이기 때문에 로봇산업의 발전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세금에 대한 로봇의 적용 기준이 불분명하다. 아직 로봇을 두고 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규정조차 완벽히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상 인격이 있는 자만이 납부하는 세금을 로봇에게 적용시키려 하는 것은 굉장히 선부른 일이다. 또한 위의 문제를 해결했다 가정 하여도 각기 다른 형태와 크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로봇에 대해 일일이 세금에 대한 범위를 제정하는 것도 기준이 매우 모호해진다. 세 번째, 탈세 수단이 증가할 우려가 존재한다. 이는 위의 주장과도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데 모두 다른 형태의 로봇에 각각의 세금을 부과하게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든 로봇을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도록 생산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국가 입장에서 기존에 인간이 내던 ‘근로소득세’보다 더 적은 양의 세금을 징수하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소리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로봇세 도입’에 대하여 반대한다. ‘로봇세 도입 반대’라는 의견이 옳은 판단인가에 대한 확실성은 없다. 그러나 ‘인간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로봇세 도입’을 두고 하는 논쟁 행위 자체가 우리 인간의 삶의 수준과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p>
<p>해설</p>	<p>윗글은 대체로 자연스럽고 논증에 효과적인 문장과 어휘를 사용하였으나, 일부 문장과 어휘 사용에서는 부적절한 경우도 있어 ‘표현 1’의 4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p> <p>먼저 문장의 자연스러움과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예상하여 만든 의도와 다르게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며’에서는 무엇과 무엇이 팽팽하게 대립하는지가 표현되지 않아 문장 호응에 문제가 있다. 이 문장은 ‘긍정적 효과를 예상하여 로봇세를 찬성하는 의견과 로봇세의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는 의견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며’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p> <p>다음으로 어휘 사용의 적절성 측면에서 보면, ‘빠르게 발전하는 로봇 산업의 기대가 저하된다’는 해당 글의 문맥을 고려하면 ‘로봇 산업의 발전이 저하된다’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세금에 대한 로봇의 적용 기준이 불분명하다’와 같은 표현도 ‘세금을 적용할 로봇의 범위가 불분명하다’와 같이 쓰는 것이 적절하다.</p> <p>또한 문법적인 오류는 아니지만 논증에 효과적이지 않은 표현들도 일부 눈에 띈다. ‘판단하고 있다’는 ‘판단된다’로 수정하는 것이, ‘이 과정에서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면서’는 ‘이 과정에서’나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중 하나를 삭제하는 것이 논증에 더 효과적이다.</p>

❖ 3점 사례: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과 부적절한 어휘가 사용되었으나,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크게 방해가 되지 않음(한 단락에 한두 개의 오류가 있음)

<p>답안 사례</p>	<p>나이가 들면 신체적 노화로 인해 각종 능력 등이 감소하고, 이는 운전 중 사고 위험 증가에 큰 영향을 준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와 관련해 조사한 기사에 첨부된 가해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현황 그래프를 보면 고령 운전자는 다른 연령대의 운전자들보다 교통사고 유발률, 각 사고에 해당하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u>현대사회의 고령화라는 사회 현상으로 인해 총인구 중에 고령자의 인구 비율이 점차로 많아지고, 이와 더불어 고령 운전자 증가 폭도 점점 더 커져 앞으로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제한에 대한 대안도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u></p> <p>하지만, 위의 사례만 가지고 선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u>고령 운전자 중에는 주행 경험이 풍부하고, 안전 운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있으므로</u> 그들의 운전이 미숙할 것이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또한 일부 지역이나 상황에서는 대중교통 수단이 제한적일 수 있는데 이러한 지역이나 상황에서 면허를 제한하게 된다면 해당 운전자들의 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제한은 그들의 사회 참여를 간접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고령 운전자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p> <p>어떤 상황에서도 적용되듯이 한쪽으로 너무 편향되지 않고, <u>각 대안의 이점을 잘 종합시켜 결론을 도출시키는 것이</u>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노화에 따른 각종 능력의 감소가 운전 중 사고 위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점, 나이만으로 운전 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이 두 가지 점을 종합해 <u>운전 능력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u> 이 평가는 개별적으로 시행되면 될 것이다. 나이에 따른 사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의견이므로 이 내용을 토대로 연령대별로 운전 평가 시행 주기를 조정하면 될 것이다. 운전면허 제한으로 인해 도출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 활동 범위 제한 등의 부작용은 대중교통 개편, 경제적인 지원 등의 추가 대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결론지을 수 있는 주제는 아니겠지만, 여러 의견의 장단점을 서로 잘 상쇄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과정이 반복된다면 좋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p>
<p>해설</p>	<p>윗글은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과 부적절한 어휘가 사용되었으나,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크게 방해가 되지는 않으므로 '표현 1'의 3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p> <p>먼저 문장의 자연스러움 측면에서 보면, 문장 성분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장들이 여럿 눈에 띈다. '고령 운전자 중에는 주행 경험이 풍부하고, 안전 운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있으므로'라는 표현은 '고령 운전자 중에는'으로 시작하였으므로 '~한 사람(운전자)도 있으므로'로 고쳐야 문장 호응에 문제가 없게 된다. '운전 능력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는 '운전 능력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로 고쳐야 자연스럽다.</p> <p>다음으로 문장 표현의 효과성을 검토해 보면, 첫 번째 문단의 밑줄 친 문장은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의미가 바로 이해되지 않고, 접속에도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고려하면, '예상되고'를 '예상되므로'로 고치거나 '예상된다. 그러므로'와 같이 일단 문장을 종결하고 다음 문장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p> <p>마지막으로 어휘 사용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각 대안의 이점을 잘 종합시켜 결론을 도출시키는 것이'에서 '종합시켜', '도출시키는'은 각각 '종합하여', '도출하는'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p>

❖ 2점 사례: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과 부적절한 어휘가 사용되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됨(한 단락에 두 개 이상의 심각한 오류가 있음)

<p>답안 사례</p>	<p>로봇세를 도입함으로써 그 예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다른 대책을 구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u>로봇의 발달로 일자리 대체 비율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무쳐서 같은 사람끼리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경향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럴 때 로봇세 도입을 실시하여 로봇 관련 일자리 창출을 하거나, 로봇 남용을 하지 않게 만들고, 로봇을 개조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u> 로봇 관련 일자리 창출로서 로봇을 수리하는 사람, 로봇이 고장날 것을 대비해 로봇 관련 보험을 들어주는 사람,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 로봇 관련 신고를 처리하는 사람, 차량을 튜닝하듯이 로봇을 튜닝해주는 사람 등 여러 일자리가 존재한다. <u>로봇 남용은 만약에 로봇세 도입을 하지 않으면 로봇의 본 가격만 제공하면 되니까 공장 같은 경우에 여러 대 구입할 것이다.</u> 그렇게 되면 공장에서는 사람 대신 로봇으로 대체하면 기본 운영비에서 많은 비용을 줄이기가 가능하여 일을 가동하기에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 무조건 사람보다 로봇만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로봇세를 도입하면 로봇 구입 후 지속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이 존재하니 고려해야 할 사항이 늘어나서 로봇보다 사람을 쓰는 경우가 존재할 것이다. 로봇을 개조하는 경우는 좋은 쪽으로 로봇의 발전을 위하여 이루어진 작업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현재 로봇에게 감정을 느끼게 하는 기술은 넣으면 불법으로 간주하듯이 <u>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배제가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로봇 개조가 이루어진다면</u> 그것을 막기 위해 로봇세를 도입하여 로봇 관련 법을 늘리는 것이다. 법 부분에서 <u>관련 사항이 늘어날수록 중요 사항으로 치부되고</u>,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3가지 사항을 살펴보았는데 3가지 사항 다 나의 추측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참고한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세 번째는 참고보다는 그저 나의 추측을 통해 나온 글이므로 타당성이 없고, 로봇세 도입 목적과는 연관성이 부족해 보였다.</p>
<p>해설</p>	<p>윗글은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과 부적절한 어휘의 사용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되는 정도여서 ‘표현 1’의 2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p> <p>먼저 문장 표현의 자연스러움 측면에서 보면, 두 번째 문장은 주어가 없으므로 ‘경향을 가질 수도’가 아니라 ‘경향이 나타날 수도’와 같이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세 번째 문장은 관련성이 적은 내용들을 지나치게 병렬적으로 열거하여 초점이 분명하지 않게 되었다. 다섯 번째 문장은 주어 ‘로봇 남용은’과 서술어 ‘구입할 것이다’가 서로 호응하지 않아 부자연스럽다.</p> <p>다음으로 문장 표현의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로봇을 개조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발판’과 같은 표현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로봇을 개조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로봇을 개조’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어 의미 전달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배제가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로봇 개조가 이루어진다면’과 같은 표현은 문장의 앞뒤 맥락을 모두 고려해도 글쓴이가 의도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p> <p>마지막으로 어휘 사용의 적절성 측면에서, ‘중요 사항으로 치부되고’는 ‘중요 사항으로 여겨지고’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치부되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어휘와 함께 쓰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p>

- ② 1점 사례: 문장 대부분이 부자연스럽고, 글의 맥락에 어울리지 않는 어휘가 많아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크게 방해가 됨

답안 사례	<p>‘로봇세’라는 말을 왜인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들어 본 적이 있다. 요즘, 4차 산업 시대, 무인 시대 등 사람 대신 로봇이 일을 하는 시대가 온 수준을 넘어 지배하기 직전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이것과 항상 같이 등장하는 말이 ‘실업’이다. 사람 대신에 로봇이 일을 하다 보니 그에 맞는 서비스직이 없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면 나는 ‘서비스직 대신 만드는 로봇이 등장하면’ 로봇 만드는 직업 외에는 남아 있는 직업은 전문직 그 정도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로봇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천지 차이이다. 인간은 노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 감정 등 부가적인 요소들이 많지만 로봇은 인간이 설정한 값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이 만들어지게 되면 인간의 할 일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로봇세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인 로테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대신하여 하는 노동도 노동으로 인정하여 수입으로 보고 사람과 동등하게 부과해야 한다. 지금 사람들이 수입을 하며 벌고 있는 돈의 일부를 내는 것이 세금이며, 이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도 있을 터인데, 로봇이 수입을 대신한다고 하여 수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로봇의 수입 중 일부는 ‘로봇세’라는 명목하에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또한 로봇이 사람을 대체함으로써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로봇이 등장함으로써 로봇 하나가 사람 한 명이 일할 수 있는 분량보다 더 많이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 이를 대비하여 ‘로봇세’라는 명목하에 거둬들인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 같다.</p>
해설	<p>윗글은 문장 대부분이 부자연스럽고, 글의 맥락에 어울리지 않는 어휘가 많아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크게 방해가 되므로 ‘표현 1’의 1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p> <p>먼저 문장 표현의 자연스러움 측면에서 보면, 두 번째 문장의 ‘사람 대신 로봇이 일을 하는 시대가 온 수준을 넘어 지배하기 직전’은 뒤 절의 주어와 목적어가 모두 생략되어 어색하다. ‘사람 대신 로봇이 일을 하는 시대가 온 수준을 넘어 로봇이 산업을 지배하기 직전’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섯 번째 문장의 ‘서비스직 대신 만드는 로봇이 등장하면’이라는 표현에서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무엇을 대신 만드는 로봇을 뜻하는지 알 수 없다. 아홉 번째 문장의 ‘사람을 대신하여 하는 노동도 노동으로 인정하여 수입으로 보고 사람과 동등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부분도 무엇을 수입으로 볼 것인지, 무엇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인지 목적어가 드러나지 않아 부자연스럽다. ‘사람을 대신하여 하는 노동도 노동으로 인정하여 로봇으로 인한 수익도 수입으로 보고 그에 대한 세금을 사람과 동등하게 부과해야 한다.’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로봇 하나가 사람 한 명이 일할 수 있는 분량보다 더 많이 할지도 모른다.’라는 문장에서는 ‘더 많이 할지도’라는 서술어에 대한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 부자연스럽다. ‘로봇 하나가 사람 한 명이 일할 수 있는 분량보다 더 많이 일을 할지도 모른다.’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문장은 주어가 생략되어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와 같이 주어가 나타나야 한다. 마지막 문장 또한 ‘지원하다’의 목적어가 생략되어 부자연스럽다.</p> <p>다음으로 문장 표현의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열 번째 문장은 ‘수입’이라는 어휘를 잘못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과 세금에 대한 여러 내용의 문장이 한꺼번에 열거되어 있어 글쓰기가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p> <p>또한 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어휘들을 문맥에 맞지 않게 사용하여 어휘 사용의 적절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서비스직’, ‘전문직’, ‘부가적인 요소’, ‘로테이션’, ‘수입’ 등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쓰인 용어들을 모두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글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문장 전체의 의미 파악에 크게 방해가 된다. 여덟 번째 문장의 ‘그리하여’도 문맥에 맞지 않는 접속 표현이어서 문장의 의미 파악을 방해한다.</p>

9 어문 규범과 관습

하위 준거	9-1. 어문 규범 준수(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준수하였는가?)
	9-2. 글쓰기 관습 준수(장르 관습에 맞는 문어적 표현을 사용하는가?)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문 규범 위반이 가끔 나타나는 경우 1점을 감점하고, 어문 규범 위반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우 2점을 감점함 * 단순 오타자도 어문 규범 위반으로 판단함 * 문장 부호 오류(마침표 대신 쉼표를 쓴 경우, 쉼표 대신 마침표를 쓴 경우, 마침표를 쓰지 않은 경우 등)도 어문 규범 위반으로 판단함. 단, '쉼표'의 사용은 마침표를 쓸 자리에 쉼표를 쓴 경우 외에는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 띄어쓰기 위반 여부는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명사+명사', '동사+동사' 구성('혐오 표현', '언어생활', '알아보다', '알잡아 보다' 등)에 해당하는 어구의 띄어쓰기는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 '해라체'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하십시오체'를 쓰더라도 감점하지 않음 * 단, 특별한 사유 없이 '해라체'와 '하십시오체'를 섞어 쓰거나, 비격식체(해체/해요체)를 사용하는 경우 1점을 감점함 - 자기소개, 인사말 등 장르 관습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였거나, 구어체 준말('위해선, 누군가에겐, 어떤 걸' 따위)을 자주 사용한 경우 1점을 감점함 - '아마 ~일 것이다, ~인 것 같다, ~로 볼 수 있을 듯하다' 등과 같이 주장의 명확성이나 논거의 객관성을 약화할 수 있는 유보적 표현을 자주 사용한 경우 1점을 감점함 - 기타 단정적인 어조 등 관습과 무관한 문체상의 특징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음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점) 어문 규범과 글쓰기 관습을 매우 정확히 준수함 - (4점) 어문 규범 위반이 가끔 나타나거나 한 가지 유형의 글쓰기 관습 위반이 나타남 (어문 규범과 글쓰기 관습, 둘 중 하나만 문제가 있음) - (3점) 어문 규범 위반이 가끔 나타나며, 한 가지 유형의 글쓰기 관습 위반이 나타남. 혹은 어문 규범은 정확히 준수하였으나 두 가지 유형의 글쓰기 관습 위반이 나타남. 혹은 어문 규범 위반이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글쓰기 관습은 정확히 준수함 - (2점) 어문 규범 위반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한 가지 유형의 글쓰기 관습 위반이 나타남. 혹은 어문 규범 위반이 가끔 나타나며, 두 가지 유형의 글쓰기 관습 위반이 나타남 - (1점) 어문 규범 위반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두 가지 유형의 글쓰기 관습 위반이 나타남

‘표현 2’에 해당하는 ‘어문 규범과 관습’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기본적인 국어 규범을 준수하여 글을 작성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준거이다. 이 준거의 하위 요소는 ‘어문 규범 준수’와 ‘글쓰기 관습 준수’로 나뉜다.

‘어문 규범 준수’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한글 맞춤법이나 외래어 표기법과 같은 표기 규범을 따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오타자도 오류로 판정한다. 진단 기준안에서는 이러한 규범 미준수 오류가 글 전체에 거의 나타나지 않으면 감점이 없으며, 가끔 나타나는 경우에는 1점을,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2점을 감점한다. ‘가끔’과 ‘빈번하게’를 구분하는 기준점은 글의 분량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한 문단 내에 한두 개의 규범 미준수가 나타나는 경우를 ‘가끔’, 이를 초과하는 경우 ‘빈번하게’로 판단할 수 있다.

‘글쓰기 관습 준수’는 논증적 글쓰기라는 장르 관습에 적합한 문어적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글 전체에 걸쳐 일관된 종결 어미를 사용하지 않거나, 구어체를 사용하는 것은 논증적 글쓰기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감점을 받게 된다. 글쓰기 관습 역시 크게 종결 어미 부적합 유형과 장르 관습에 맞지 않는 표현 사용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유형이 나타날 때마다 1점씩 감점하여, 최대 2점이 감점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 어문 규범과 관습 채점 사례

⑤ 5점 사례: 어문 규범과 글쓰기 관습을 매우 정확히 준수함

답안 사례

로봇이 낫설고 생소하기만 했던 과거와는 달리,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제 로봇은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가 되었다. 로봇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에는 인간이 했던 일을 로봇이 대체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인간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문제가 생겼다. 사람들은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로봇의 노동으로 생산하는 경제 가치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 세금이 바로 ‘로봇세’이다.

나는 로봇세 도입에 찬성한다. 그 첫 번째 근거는, 로봇세를 도입함으로써 인간의 일자리를 로봇이 무분별하게 대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로봇의 노동에 아무런 세금도 부과하지 않고 이를 방임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인간을 고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을 고용하는 것보다 로봇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소수의 고용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발도 들이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두 번째 근거는, 로봇세 도입이 오히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로봇세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로봇세를 도입하는 것이 로봇 기술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자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로봇세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의 불만과 실질적인 피해를 간과한 것이다. 로봇세 부과 없이 로봇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로봇에 대한 반감을 가져올 것이다. 로봇세 도입으로 정당한 대가를 치르며 로봇을 노동에 이용한다면, 로봇을 무작정 반대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고 로봇 기술은 사람들의 부정적 반응 없이 발전을 거듭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근거는, 로봇세를 도입함으로써 국가도 정당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람이 생산한 경제 가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만약 로봇이 대부분의 노동을 담당하는데 그에 대한 세금은 걷을 수 없다면, 국가 입장에서 이는 엄청난 손해이고 국가의 발전이 저해될 것이다. 로봇세로 정당한 세수를 확보하면 이것이 국가 발전의 밑거름으로 쓰여 선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근거를 토대로 나는 로봇세 도입에 찬성한다. 과학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우리는 이제 로봇과 같은 과학기술의 산물과 공생해야 한다. 로봇세 도입은 단순히 로봇에 대한 반감으로 로봇을 거부하려는 것이 아닌, 로봇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생의 방안이다.

해설

윗글은 어문 규범과 글쓰기 관습을 매우 정확히 준수하였으므로 ‘표현 2’의 5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

글 전반에 표기법 및 띄어쓰기 오류가 나타나지 않으며 오타자도 없다. 또한 논증적 글쓰기의 장르 관습에 맞는 문어적 표현을 일관되게 구사하였다.

④ 4점 사례: 어문 규범 위반이 가끔 나타나거나 한 가지 유형의 글쓰기 관습 위반이 나타남
(어문 규범과 글쓰기 관습, 둘 중 하나만 문제가 있음)

<p>답안 사례</p>	<p>정보화 사회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면서, 혐오와 증오의 정서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매체를 통해 혐오와 증오를 서슴없이 발산하는 현 사회에서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성별 갈등과 세대 갈등에 관한 사안은 단순한 사인간의 갈등을 넘어 정치적 분란과 공동체의 해체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나는 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하는 바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규제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는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열거주의식으로 엄격하게 제한의 요건을 규정하여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혐오는 지극히 주관적인 영역이기에 합법적인 혐오표현과 불법적인 혐오표현의 경계를 정하기란 쉽지 않다. 둘째,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는 자칫 검열과 사상의 통제로 이어지기 쉬우며 이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의 기본 이념에 어긋난다. 물론 혐오표현이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그 표현이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포용적이던 혐오적이던, 모든 표현은 일단 존중받을 가치를 지닌다. 의사표현의 자유로운 표명은 진리를 추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개인의 자아와 인격을 발전시킴에 있어 필수 불가결하다.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공권력을 국가에 부여한다면 정치적 의도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지나친 혐오적 표현을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편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별개로 규제하고 형사범죄화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만약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차별적 정서와 편견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들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이 사라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혐오표현에 의한 차별과 폭력에 선동되지 않도록 하고 법적인 규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지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세가지 이유로, 나는 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에 반대하는 바이다.</p>
<p>해설</p>	<p>윗글은 논증적 글쓰기의 장르 관습에 맞는 문어적 표현을 일관되게 구사하였으나, 어문 규범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가끔 나타나므로 '표현 2'의 4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p> <p>맞춤법 오류로는 '-든'을 사용할 자리에 '-던'을 사용한 것이 있다.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포용적이던 혐오적이던'은 맥락상 무엇이든 가리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므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포용적이든 혐오적이든'과 같이 써야 한다. 띄어쓰기 오류도 몇 군데 눈에 띈다. 밑줄 친 부분은 '사인 간', '자유민주주의하에서', '세 가지'와 같이 써야 한다.</p> <p>참고로, '혐오 표현'의 경우 앞부분에서는 띄어 쓰고 뒷부분에서는 붙여 썼는데, 같은 표현은 되도록 띄어쓰기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 ③ 3점 사례: 어문 규범 위반이 가끔 나타나며, 한 가지 유형의 글쓰기 관습 위반이 나타남.
 혹은 어문 규범은 정확히 준수하였으나 두 가지 유형의 글쓰기 관습 위반이 나타남.
 혹은 어문 규범 위반이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글쓰기 관습은 정확히 준수함

<p>답안 사례</p>	<p>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 인공지능 로봇 도입과 함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늘어날 우려가 생기게 된다. <u>이를 통해 로봇세 도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다.</u></p> <p>로봇세를 도입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는 사회에서 인공지능형 로봇이 확산됨에 따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u>업무가</u> 늘어날 것이고, 이에 대한 우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일이 늘어남에 따라 로봇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이다.</p> <p>로봇세의 도입은 필요하다. 로봇세란 그 말대로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인간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실업한 사람들은 대부분 낮은 <u>임금을 받는 일자리라던가</u> 기계의 자동화로 인해 로봇이 충분히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이다. 로봇세 도입을 통해서라도 급속도로 발전하는 자동화의 속도를 늦추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p> <p>사람도 세금을 낸다. 로봇이 일을 한다는 것은 로봇에게 인격을 부여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하여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로봇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사람으로 <u>인식을 해야 하기</u> 때문에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p> <p>지금까지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유지되겠지만, 앞으로 <u>자동화가 급가속화 되고</u>, 인공지능형 <u>로봇을 넘어선 더 발전 되어진</u> 기계들이 나오게 된다면, 사람들 대부분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실업률은 증가하게 되며 사회는 결국 인간을 통해서는 <u>유지되지 못 할</u> 것이다. 그 말대로 로봇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얼마 멀지 않은 미래가 될 수도 있기에 우리는 '로봇세 도입'을 통해 미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
<p>해설</p>	<p>윗글은 어문 규범 위반이 가끔 나타나며, 한 가지 유형의 글쓰기 관습을 위반하였으므로 '표현 2'의 3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p> <p>첫 문단의 '이를 통해 로봇세 도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다'와 같은 표현은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추측하는 표현을 하여 논증적 글쓰기의 관습을 어긴 것으로 판단된다.</p> <p>'업무가'는 '업무가'의 오키이며, '일자리라던가'는 '일자리라든가'의 잘못이다. '해야하기'는 '해야 하기'로, '급가속화 되고'는 '급가속화하고'로, '발전 되어진'은 '발전된'으로, '유지되지 못 할'은 '유지되지 못할'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p>

- ② 2점 사례: 어문 규범 위반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한 가지 유형의 글쓰기 관습 위반이 나타남.
 혹은 어문 규범 위반이 가끔 나타나며, 두 가지 유형의 글쓰기 관습 위반이 나타남

<p>답안 사례</p>	<p>혐오표현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왜 혐오표현을 규제를 해야하는가에 관해서는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모욕감을 주어서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혐오스러운 표현을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심으로 받아들여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옆에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듣기에 가부감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하고 혐오표현으로 인해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 그리고 혐오스러운 표현을 하는 사람 자신은 의도적으로 장난스럽게 말로 한다거나 행동으로 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가 아닌 무심코 내 입에서 혐오적인 표현이 나오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내가 말한 것이 혐오표현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고칠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p> <p>상대방의 입장으로 고려하고 생각해서 표현을 해야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은 멍청하다” 친구들끼리 장애 이런표현이 몸의 어느 한부분이 이상이 있고 병을 앓고 있지만 같은 인간인데 위에서 말한 표현을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리고 들은 주제인 고령 운전자 면허 제한에서 고령 운전자에게 운전 제한해야한다 역시 혐오표현이 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분들이 면허 제한을 받게 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를 해야하는 동시에 우리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내가 상대방에게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내가 말하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 혐오 표현인데도 인지를 못하고 계속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혐오표현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어야하고 우리 사람들은 혐오표현이라는 것을 인지를 잘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내뱉고 있고 장난으로 삼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고치고 변화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해야한다. 그래서 나는 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하고 표현하자. 만약 내가 이미 무언가를 표현했더라도 내가 실수로 잘못 말한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p>
<p>해설</p>	<p>윗글은 어문 규범 위반이 가끔 나타나며, 두 가지 유형의 글쓰기 관습 위반이 나타나므로 ‘표현 2’의 2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p> <p>어문 규범 위반과 관련해서는, ‘해야한다’라는 표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모두 ‘해야 한다’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이 밖에 ‘이런표현’, ‘한부분’, ‘고령자 분들이’, ‘다시한번’ 등도 ‘이런 표현’, ‘한 부분’, ‘고령자분들이’, ‘다시 한번’과 같이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옳다. 또한 ‘가부감’은 ‘거부감’의 오타이다.</p> <p>글쓰기 관습과 관련해서는, 첫 문단의 ‘무심코 내 입에서 혐오적인 표현이 나오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내가 말한 것이 혐오표현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고칠 수 있도록’이나 두 번째 문단의 ‘내가 상대방에게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내가 말하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만약 내가 이미 무언가를 표현했더라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나’를 드러내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모두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하고 표현하자. 만약 내가 이미 무언가를 표현했더라도 내가 실수로 잘못 말한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표현에서는 청유형 문장을 반복하였다. 이처럼 ‘나’를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나 청유형 문장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모두 논증적 글쓰기의 장르 관습에 맞지 않는 표현이다.</p>

❖ 1점 사례: 어문 규범 위반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두 가지 유형의 글쓰기 관습 위반이 나타남

<p>답안 사례</p>	<p>저는 OO대학교 OOOOO를 다니고있는 OOOO과 OO학번 OOO입니다. 저는 고연령자의 운전면허를 <u>반납해야한다고</u>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연령자분들<u>께서</u> 만약 사고가 나면 저연령자들도 <u>위험하긴하지만</u> 고연령자분들<u>께서는</u> 몸이 <u>약해져있고</u> 뼈도 많이 삭아서 사고가 나면 한순간에 <u>돌아가실수도</u>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에서 흔히 불리는 김 여사 운전을 잘못하여 여러 사회구성원들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람으로 되어 <u>사람들과에</u> <u>불란</u>을 일으킬수도있으며 접촉사고가 났는데 젊은 사람과 싸움이 나거나 말이 통하지 않아 젊은 사람에게 해코지를 <u>하고나</u> 때리면 젊은 사람들은 고연령자들을 때리거나 욕을 할수 없을 뿐더러 자기 <u>부모님나이때</u> 사람들에게 막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고연령자들<u>께</u> <u>당할수도</u> 있기도 하고 운전자가 고연령자인데 만약 운전자가 운전하다 갑자기 기절을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인해 <u>돌아가실수도있고</u>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 앞차에 돌진 이런 경우 아무 <u>이유없이</u> 다른 차에 타 있는 사람들은 <u>경상, 중상</u> 심하면 <u>돌아가실수도</u> 있으며 전방에 동물, 물체, 다른 <u>어떤것들이</u> 있는데 노안으로 인해 <u>그런것을</u> 보지 못하여 한순간에 사고로 목숨을 <u>잃을수도있다.고연령자들이</u>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60살이 되면 갱신하는 제도가 있으면 고연령자들의 <u>주행가능한 능력이있는지</u> 확인하고 <u>나라에수</u> 갱신해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비율이 훨씬 <u>저조해 질것이다.</u> 그리고 이 <u>모든걸</u> 통틀어 고연령자들의 자식들이 자기의 <u>부모,형제가</u> 나이가 들어 운전을 하고 다니면 걱정을 하며 <u>살것이고</u> 불안해한다. 그러므로 저는 운전면허가 <u>일정나이가</u> 되면 <u>반납해야된다고</u> 생각합니다.</p>
<p>해설</p>	<p>윗글은 어문 규범 위반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두 가지 유형의 글쓰기 관습 위반이 나타나므로 ‘표현 2’의 1점에 해당하는 글로 판정할 수 있다.</p> <p>어문 규범과 관련해서는, ‘다니고 있는’, ‘위험하긴 하지만’, ‘약해져 있고’, ‘돌아가실 수도’, ‘일으킬 수도 있으며’, ‘부모님 나이대’, ‘당할 수도’,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이유 없이’, ‘경상, 중상’, ‘돌아가실 수도’,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 ‘잃을 수도 있다. 고연령자들이’, ‘주행 가능한’, ‘능력이 있는지’, ‘저조해질 것이다.’, ‘모든 걸’, ‘부모, 형제가’, ‘살 것이고’, ‘일정 나이가’, ‘반납해야 된다고’ 등과 같이 띄어 써야 하는데 붙여 쓴 오류들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또한 ‘사람들과에’, ‘불란’, ‘하고나’, ‘나이때’, ‘나라에수’와 같이 맞춤법 오류 또는 오타자로 추정되는 부분도 많다.</p> <p>글쓰기 관습과 관련해서는, 첫 문장을 자기소개로 시작한 점, ‘께서’, ‘께서는’, ‘께’ 등 고연령자와 관련된 표현에 높임 표현을 사용한 점이 논증적 글쓰기의 장르 관습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서는 ‘-습니다’체를 사용하다가 중간에 ‘-다’를 사용하고 있어 종결 어미의 사용도 일관되지 않는다.</p>

영역	준거	하위 준거(기준)	배점	설명 및 비고
표현	1. 문체 및 어조	1-1. 글쓰기 및 장르에 어울리는 표현	3	글쓰기와 해당 장르(논설문, 설명문 등)에 어울리는 적합한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2. 어문 규범	2-1. 어문 규범의 준수	3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과 같은 어문 규범에 따라 정확하게 표기하였는가?
	3. 문장의 정확성	3-1. 문장 성분 호응의 정확성	3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누락되지 않고, 문장 성분들이 적절하게 호응하였는가?
		3-2. 문장 구조의 정확성	3	언어 단위의 접속이나 수식-피수식 관계에 오류가 없고, 중의성이 없는 문장으로 이루어졌는가?
		3-3. 문법적 표현의 정확성	3	조사와 어미를 문법적으로 바르게 사용하였는가?
	4. 어휘 의미	4-1. 의미가 정확하고 적절한 어휘	5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의미와 형식이 가장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였는가?
		4-2. 함께 사용된 어휘와의 의미 관계가 적절한 어휘	3	함께 사용된 어휘와의 의미 관계가 관습적, 논리적으로 적절한가?
	5. 표현의 간결성	5-1. 간결한 표현	3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나 문구를 불필요하게 반복하지 않고 간결하게 표현하였는가?
	6. 독자에 대한 고려	6-1. 독자를 고려한 어휘	2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외래어, 전문 용어, 약어 등을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대체 하거나 보충 설명을 제공하였는가?
총점			28	

1 문체 및 어조

하위 준거	1-1. 글쓰기 및 장르에 어울리는 표현(글쓰기와 해당 장르에 어울리는 적합한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 언어 관습이란 글쓰기에 적합한 문어적 표현을 뜻함. 따라서 논증적 글쓰기나 설명적 글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구어체 준말이나 어미가 사용된 경우에는 감점함 * 구어체 준말은 ‘먹튀’ 등과 같은 약어(줄임말)가 아니라 ‘극복하기 위해선, 누군가에겐, 보여야 되는 건, 나타내는 게, 어떤 걸’ 등에 보이는 ‘위해선, 에겐, 건, 게, 걸’ 등과 같은 것을 말함 - ‘해라체’를 쓰는 것을 권장함. 단, ‘하십시오체’를 일관되게 쓴 경우에는 감점하지 않음. ‘해라체’와 ‘하십시오체’를 혼용하거나, 비격식체(‘해체’, ‘해오체’)를 쓴 경우에는 감점함 - 논증에 불필요한 추상적, 감정적, 유보적인 표현 등이 쓰인 경우에는 감점함 - 주장의 명확성이나 논거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유보적 표현(‘아마 ~일 것이다’, ‘~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다/생각되다’ 등)이 불필요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감점함. 단, 해당 표현이 주제의 복잡성을 반영해 신중함을 나타내고, 논증의 설득력이나 일관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않음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점) 글의 대부분이 문자 언어 관습을 따르며 장르에 어울리는 표현으로 나타남 - (2점) 문자 언어 관습을 따르지 않거나 장르에 불필요한 표현이 일부 나타남 - (1점) 문자 언어 관습을 따르지 않거나 장르에 불필요한 표현이 다수 나타남
사례	<p>○ 대부분의 문장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으면 3점 ○ 일부의 문장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례가 나타나면 2점 ○ 다수의 문장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례가 나타나면 1점</p> <p>가. 구어적 표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언제부터일까? 세상이 혐오 표현들로 뒤덮이기 시작한 게.</u>(→언제부터인가 세상은 혐오 표현들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SNS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혐오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하는 사람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을 것이다. - 일을 구하려는 의지 없이 지원금만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u>거니</u>(→<u>것이므로</u>) - 그렇기에 <u>누군가에겐</u>(→<u>누군가에게는</u>) 정당한 비판으로 보일지라도 다른 <u>이에겐</u>(→<u>이에게는</u>) 모욕적으로 비칠 수도 있다. - 법적으로 규제가 있다면 조금 더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u>규제하는 게</u>(→<u>규제하는 것이</u>) <u>좋은 거</u>(→<u>좋은 것</u>) 같다. -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u>걸</u>(→<u>것을</u>) 막기 위해 - 사람들이 일을 하려는 의욕이 떨어져서 직장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u>되어 있죠</u>(→<u>될 것입니다</u>).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로봇세 도입을 해야 합니다. - 물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현대사회를 이루게 하고 발전하는 데 큰 지분을

지난 **활동**이다. 그러나 남을 낮추려는 혐오 표현으로 변질하면 일방적인 폭행으로 간주된다. 또 혐오 표현이 규제 없이 남용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할까 두려워 표현의 자유를 실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종결 어미를 일관되게 사용하지 않음)

- 우리 모두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하고 **표현하자**. 만약 내가 이미 무언가를 표현했더라도 실수로 잘못 말한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논증적 글에 부적합한 종결 어미를 사용함)

나. 추상적, 감정적 표현

- 이대로 놔두었다간 우리 모두 혐오 행위에 잠식되고 말 것이다. **차근차근 썩은 가지들을 잘라내고 구정물이 아닌 맑은 물을 준다면 새하얀 꽃들이 만개한 세상이 찾아오지 않을까?**
- 다른 순화적인 표현을 쓰고 우리가 쓰는 말들이 **조금이나마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 나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돼도 사람끼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 우리는 **별 것 아닌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과 연관 지어 남을 **까내리는** 대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의 우리는 **기껏해야** 뉴스나 신문, 사람들을 통해 다른 세상의 소식을 들었다.
- 이미 혐오 표현으로 **영망진창이 된** 글들을 보며 기분이 상하고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다. 유보적 표현

- 그걸 보는 청소년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온라인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일부분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악영향을 막기 위해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현실에서는 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의 범위가 애매하고 직접 마주 보면서 대화하고 의사를 나누기 때문에 무분별하고 무차별적 표현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들어와, 인공 지능 로봇 도입과 함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로봇세 도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다**.

2 어문 규범

하위 준거	2-1. 어문 규범의 준수(‘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과 같은 어문 규범에 따라 정확하게 표기하였는가?)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와 어미의 형태 표기와 용법은 모두 ‘문법적 표현의 정확성’에서 채점함 - 감점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오타자 * 문장 부호: 마침표 대신 쉼표를 쓴 경우, 쉼표 대신 마침표를 쓴 경우, 마침표를 쓰지 않은 경우 등 문장 부호를 잘못 쓴 경우 * 띄어쓰기: 조사, 어미, 접사를 띄어 쓴 경우(예: 표현 조차, 표현이 거나, 표현 상), 의존 명사를 붙여 쓴 경우(예: 나타내는만큼, 세개) 등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른 띄어쓰기를 잘못 한 경우 - 감점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 부호: 쉼표의 사용은 어문 규정상 허용 범위가 넓으므로, 마침표 대신 쉼표를 쓴 경우를 제외한 쉼표의 사용은 채점에 포함하지 않음 * 띄어쓰기: ‘명사+명사’, ‘동사+동사’ 구성의 띄어쓰기는 채점에 포함하지 않음(예: 언어 생활~언어 생활, 혐오 표현~혐오표현, 알아보다~알아 보다, 알잡아 보다~알잡아 보다)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점) 문장 부호와 띄어쓰기를 포함한 맞춤법과 표준어 사용에 오류가 없음 - (2점) 문장 부호와 띄어쓰기를 포함한 맞춤법과 표준어 사용에 오류가 일부 있음 - (1점) 문장 부호와 띄어쓰기를 포함한 맞춤법과 표준어 사용에 오류가 다수 있음
사례	<p>○ 대부분의 문장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으면 3점 ○ 일부의 문장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례가 나타나면 2점 ○ 다수의 문장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례가 나타나면 1점</p> <p>가. 띄어쓰기 오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혐오 표현으로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u>대상 뿐만(→대상뿐만)</u> 아니라 이를 간접적으로 접하는 사람들까지 - 우리는 <u>자신도모르게(→자신도 모르게)</u> 혐오 표현을 쓰고 있을 지도(→있을지도) 모른다. - 어린 나이에 이런 혐오 표현에 노출되는 환경이 <u>조성 된다면(→조성된다면)</u>, 이런 표현에 대한 경각심도 <u>없을 뿐더러(→없을뿐더러)</u> 언어에 대한 세계가 <u>만들어 질(→만들어질)</u> 시기에 - <u>자유민주주의 하에서(→자유민주주의하에서)</u> 그 표현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 이러한 <u>세가지(→세 가지)</u> 이유로, 나는 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에 반대한다. <p>나. 문장 부호 오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즘은 인터넷이나 커뮤니티가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한번 만들어진 말들이 잘 사라지지 <u>않고(→않고,)</u> 돌이키기 힘들다. -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 표현은 우리 사회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명백한 <u>악이다(→악이다.)</u> <p>다. 맞춤법, 표준어 오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런 신호를 막아선다면 표현의 자유가 <u>훼손될(→훼손될)</u>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로 인해 <u>단순이(→단순히)</u> 기분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 혐오 표현에 대해 법적인 <u>제제를(→제재를)</u> 가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u>보장율이(→보장률이)</u> 높은 국가다.

3 문장의 정확성

하위 준거	3-1. 문장 성분 호응의 정확성(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누락되지 않고, 문장 성분들이 적절하게 호응하였는가?)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 성분이 누락된 문장 구조'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등의 성분이 누락된 것을 뜻함 - '문장 성분이 호응하지 않는 문장 구조'란 필수적인 문장 성분들이 누락 없이 제시되었더라도 서로 호응하지 않는 것을 뜻함 - '문장 성분의 호응'이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뜻함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점) 대부분의 문장이 필수적인 문장 성분을 갖추었고 문장 성분이 호응함 - (2점) 문장 성분이 누락되거나 문장 성분이 호응하지 않는 문장이 일부 있음 - (1점) 문장 성분이 누락되거나 문장 성분이 호응하지 않는 문장이 다수 있음
사례	<p>○ 대부분의 문장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으면 3점 ○ 일부의 문장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례가 나타나면 2점 ○ 다수의 문장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례가 나타나면 1점</p> <p>가. 문장 성분의 누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혐오를 표현하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사회 전체적인 차별에 대한 경각심이 저하되고 풍자의 탈을 쓰고(→사람들이 풍자의 탈을 쓰고) 가해를 일삼는다. - 앞서 말했듯 혐오 표현의 대상은 주로 사회적 소수자들이 되는데 혐오 표현을 당할수록 그들은 점점 고립되고 기울어진 사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사회는 점점 더 기울어질 수 있다.) -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재하는(→인간이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재하는) 사회 안에서 혐오 표현은 사회의 시작과 끝을 선동하며 - 그들은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주장을(→혐오 표현 규제에 대한 반대 주장)을 제기할 것이다. -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면 사람들의 표현은 제한되고 자유를 억압받는 기분이 들 수 있다.(→사람들은 표현이 제한되고 자유를 억압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 <p>나. 문장 성분이 호응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 운전자 중에는 주행 경험이 풍부하고, 안전 운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있으므로(→축적된 사람도 있으므로) 그들의 운전이 미숙할 것이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 먼저 로봇 남용은(→먼저 로봇 남용에 대해 살펴보면,) 만약 로봇세를 도입하지 않으면 로봇 가격만 지불하면 되므로 기업은 많은 로봇을 구입할 것이다. - 이것을 법적인 싸움까지 들어가게 되면(→이것이 법적인 싸움에까지 들어가게 되면) 더 큰 감정, 돈, 시간이 소모된다. - 이들의 주장은 혐오 표현 역시도 표현의 한 종류이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한다.(→이들의 주장은 ~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위 준거	3-2. 문장 구조의 정확성(언어 단위의 접속이나 수식-피수식 관계에 오류가 없고, 중의성이 없는 문장으로 이루어졌는가?)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단위의 접속이 적절하다는 것은 언어 단위가 접속될 때 단어는 단어끼리, 구는 구끼리, 절은 절끼리 접속된 문장 구조라는 뜻임 - 문장의 중의성에 대한 판단은 문장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구조적 중의성, 수식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 주로 해당)만 대상으로 하며, 동음이의어와 같은 단어 자체의 의미 때문에 발생하는 중의성은 고려하지 않음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점) 대부분의 문장에서 언어 단위의 접속과 수식-피수식 관계가 적절하고 중의성이 없는 문장 구조를 보임 - (2점) 언어 단위의 접속과 수식-피수식 관계가 적절하지 않거나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문장이 일부 있음 - (1점) 언어 단위의 접속과 수식-피수식 관계가 적절하지 않거나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문장이 다수 있음
사례	<p>○ 대부분의 문장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으면 3점 ○ 일부의 문장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례가 나타나면 2점 ○ 다수의 문장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례가 나타나면 1점</p> <p>가. 접속 구조의 오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사회의 고령화라는 사회 현상으로 인해 총인구 중에 고령자의 인구 비율이 점차로 많아지고, 이와 더불어 고령 운전자 증가 폭도 점점 더 커져 앞으로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u>예상되고, (→예상된다. 그러므로)</u>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제한에 대한 대안도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특히 <u>인터넷이 많이 발전되었고 어린이들의 빠른 유행전파로 (→인터넷의 발전과 어린이들의 빠른 유행 전파로/인터넷이 많이 발전되었고 어린이들의 유행이 빠르게 전파되어)</u> 혐오 표현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것은 한순간일지도 모른다. - 혐오 표현이 <u>혐오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 때문에 (→혐오의 대상이 되는 ~ 존엄성을 부정하고 사회 전체에 해악을 미치기 때문에)</u> 혐오 표현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혐오 표현은 <u>고착된 편견을 견고히 하고,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폭력이다. (→고착된 편견을 견고히 하고,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이다.)</u> <p>나. 수식-피수식 관계의 오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혐오 표현은 단순히 불쾌한 감정만 <u>전달하는 것이 아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u> 심각하면 범죄 행위로 연결될 수 있다. - 혐오 표현이 언어적 표현에만 <u>머무른 것이 아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u> 특정 시선, 행동 등의 비언어적 행위로도 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p>다. 구조적 중의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혐오를 표현하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u>사회 전체적인 차별에 대한 경각심이 저하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차별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이 저하되고/차별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경각심이 저하되고)</u> 풍자의 탈을 쓰고 가해를 일삼는다. - 로봇세 도입은 <u>로봇을 개조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로봇을 개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로봇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게 로봇을 개조하기 위한)</u>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	---

하위 준거	3-3. 문법적 표현의 정확성(조사와 어미를 문법적으로 바르게 사용하였는가?)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는 ‘이/가, 을/를, 예, 에게, 에서’ 등과 ‘만, 도, 조차, 까지’ 등을 이르는 말임 - ‘어미’는 ‘보다, 보고, 보는’ 등에서 ‘-다, -고, -는’ 등을 이르는 말임 - 조사와 어미의 형태 표기가 잘못된 경우 감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에’와 ‘의’, 조사 ‘에’와 ‘에게’, ‘로서’와 ‘로써’ 등을 잘못 쓴 경우, 어미 ‘-든지’와 ‘-던지’ 등을 잘못 쓴 경우 - ‘문장 성분 호응의 정확성’과 ‘문장 구조의 정확성’에서 채점되지 않는 조사와 어미의 용법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감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짝을 이루는 조사를 잘못 쓴 경우(예: 조사 ‘부터’와 ‘까지’의 짝이 맞지 않는 경우) *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에 따른 연결 어미를 잘못 쓴 경우 * 시제 선어말 어미나 관형사형 전성 어미 등을 잘못 쓴 경우(예: ‘알맞는’과 ‘알맞은’, ‘않는’과 ‘않은’ 등을 잘못 쓴 경우) * 조사와 조사, 조사와 어미, 어미와 어미의 결합이 잘못된 경우(예: ‘함으로써’를 ‘하으로써’나 ‘함으로서’로 쓴 경우)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점) 대부분의 문장에서 조사와 어미를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사용함 - (2점) 조사와 어미를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은 문장이 일부 있음 - (1점) 조사와 어미를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은 문장이 다수 있음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문장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으면 3점 ○ 일부의 문장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례가 나타나면 2점 ○ 다수의 문장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례가 나타나면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낮은 임금을 받는 <u>일자리라던가(→일자리라든가)</u> 기계의 자동화로 인해 로봇이 충분히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이다. - 칼과 총보다 더 끔찍한 혐오 표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으로 규제를 하게 된다면 <u>위에(→위의)</u> 피해자들처럼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고 - 이전에 표출했던 행위가 <u>사회에게(→사회에)</u> 닿지 않아서 결국 혐오라는 감정까지 가지게 되었을 수도 있는데 - 로봇의 발달로 일자리 대체 비율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무쳐서 같은 사람끼리도 서로를 <u>믿지 못하는 경향을 가질 수도 있다.(→믿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믿지 못하는 일이 흔해질 수 있다.)</u>

4 어휘 의미

하위 준거	4-1. 어휘 의미의 적절성(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의미와 형식이 가장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였는가?)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향/지양’과 같이 반대되는 의미의 단어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쓰거나, 어떤 어휘의 의미를 완전히 잘못 파악하여 이해를 지연시키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점할 수 있음 - 맥락에 어울리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어휘를 사용하거나 과도한 피사동 표현을 사용하는 등 어색한 의미나 형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점할 수 있음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점)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사용하고 대체로 적절한 어휘를 선택함 - (4점)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사용하였으나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선택한 경우가 일부 있음 - (3점)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한 경우가 일부 있거나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선택한 경우가 일부 있음 - (2점)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한 경우가 빈번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선택한 경우가 빈번함 - (1점)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선택한 경우가 빈번하여 글에 대한 이해를 방해함
사례	<p>○ ‘가’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으면 3점, 빈번하면 2점 이하 ○ ‘나’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으면 4점, 빈번하면 2점 이하</p> <p>가. 어휘의 의미를 잘못 알고 사용하거나 부적절성이 큰 어휘를 사용한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소수자들만 봐도 주위의 시선과 편견으로 인해 커밍아웃은커녕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스스로 정체성을 쉽게 드러낼 수 없다는 의미로 ‘위선적인’을 사용한 것은 부적절함) - 혐오를 제거해 평등한 세상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평등’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잘못된 어휘 선택임) - 고유 명사가 된 혐오 표현은 일상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착된 표현’ 또는 ‘완화된 표현’이라는 의미로 ‘고유 명사’를 사용한 것은 부적절함) -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조언, 충고와 같은 말은 해도 된다. 하지만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본인의 유흥을 위해 남들에게 혐오 표현을 무차별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재미’ 또는 ‘흥미’라는 의미로 ‘유흥’을 사용한 것은 부적절함) - 관련 사항이 늘어날수록 중요 사항으로 치부되고(→여겨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 부정적인 맥락이 아닌 상황에서 ‘치부되다’를 사용한 것은 부적절함) <p>나. 어휘의 의미가 통하기는 하지만 가장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지는 않아 다소 어색한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혐오 표현을 의미하는(→규정하는/정의하는) 명확한 기준 -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우선되어야) 한다. - 표현의 자유를 제약시키면(→제한하면) 안 된다. -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되듯이 한쪽으로 너무 편향되지 않고, 각 대안의 이점을 잘 종합시켜(→종합하여) 결론을 도출시키는(→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위 준거	4-2. 함께 사용된 어휘와의 의미 관계의 적절성(함께 사용된 어휘와의 의미 관계가 관습적, 논리적으로 적절한가?)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사용된 어휘와의 의미 관계는 서술어와 논항, 수식어와 피수식어, 병렬된 어휘들 사이의 의미 관계를 말함 - 함께 사용된 어휘와의 의미 관계는 적절하나, 문법적 관계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준거에서 감점하지 않음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점) 함께 사용된 어휘와의 의미 관계가 관습적, 논리적으로 적절함 - (2점) 함께 사용된 어휘와의 의미 관계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음 - (1점) 함께 사용된 어휘와의 의미 관계가 적절하지 않아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남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문장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으면 3점 ○ 일부의 문장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례가 나타나면 2점 ○ 다수의 문장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례가 나타나면 1점 - 필자가 반대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u>빠르게 발전하는 로봇 산업의 기대가 저해된다.(→로봇 산업의 발전이 저해된다.)</u> - <u>세금에 대한 로봇의 적용 기준이 불분명하다.(→세금을 적용할 로봇의 범위가 불분명하다.)</u> - 혐오 표현을 <u>받다(→당하다)</u> - 혐오 표현이 <u>일어나다(→발생하다)</u> - 논의가 <u>높아지고(→활발해지고)</u> - <u>가수와 연예인(※가수도 연예인에 속하므로 병렬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움)</u> - 혐오 표현을 어떻게 <u>줄이고 인지할(→인지하고 줄일) 수 있을까?</u> - <u>자기 자신의(→자기 신체에 대한) 불완전한 통제와 흔들리는 판단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u> 도로에 나오는 것은 살인 미수에 가까운 행위이다.

5 표현의 간결성

하위 준거	5-1. 간결한 표현(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나 문구를 불필요하게 반복하지 않고 간결하게 표현하였는가?)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의 중복’은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형식의 표현을 반복하여 불필요하게 길게 표현하는 것을 말함 - ‘동일 형식의 지나친 반복’은 특정 형식을 필요 이상으로 여러 번 사용하여 글이 어색하거나 단조롭게 느껴지게 하는 것을 말함 - 특정 표현이나 용어가 글의 주제어이거나 핵심 어휘에 해당하여 반복적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동일 형식의 반복을 이유로 감점하지 않음(예: 혐오 표현에 대한 글에서 ‘혐오’를 반복 사용하는 경우)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점) 의미의 중복, 동일 형식의 지나친 반복 등의 불필요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고 간결하게 표현됨 - (2점) 의미의 중복, 동일 형식의 지나친 반복 등의 불필요한 표현이 일부 나타남 - (1점) 의미의 중복, 동일 형식의 지나친 반복 등의 불필요한 표현이 빈번하게 나타남
사례	<p>○ 대부분의 문장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으면 3점 ○ 일부의 문장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례가 나타나면 2점 ○ 다수의 문장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례가 나타나면 1점</p> <p>가. 의미의 중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 기술의 집약적인 발달로 인간의 일자리는 대부분이 인공 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다. <u>이 과정에서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면서(→이 과정에서)</u> 수많은 실업자들이 생겨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 <u>계속해서 지속되면(→계속되면/지속되면)</u> - <u>정말 진심으로(→정말/진심으로)</u> - <u>먼저 사전에(→먼저/사전에)</u> <p>나. 동일 형식의 지나친 반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 피부색, 종교 등 <u>금지된 차별 사유에 근거한 괴롭힘이 법으로 금지되어 왔으며(→인종, 피부색, 종교 등을 사유로 차별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왔으며)</u> - 국내 <u>사례로</u> 대표적인 사례는 ~한 사례이다.(→대표적인 국내 사례로는 ~가 있다.) - <u>근본적인 원인인</u> 차별, 소수자에 대한 혐오 등의 <u>근본적인 원인은</u> 해결할 수 없다.(→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할 수 없다.) - <u>혐오 표현은 굉장히</u> 위험하다. 하지만 <u>혐오 표현을</u> 법적으로 규제하여 통제한다는 것은 <u>굉장히 비현실적이며(→혐오 표현은 굉장히 위험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며)</u>

6 독자에 대한 고려

하위 준거	6-1. 독자를 고려한 어휘(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외래어, 전문 용어, 약어 등을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대체하거나 보충 설명을 제공하였는가?)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 독자’란 글쓰기가 작성한 글을 읽게 될 사람들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 논문의 경우, 같은 전공의 연구자나 전문가가 예상 독자가 될 수 있음 * 일반 대중을 위한 글의 경우, 특정 배경지식이 없는 독자를 상정할 수 있음 - ‘독자의 이해를 돕는 표현’이란 독자가 글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구성된 언어적 표현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 독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은어, 전문 용어나 약어 사용을 지양하거나 독자가 낯설게 느낄 수 있는 개념이나 표현을 사용할 경우, 그 의미를 간단히 풀이하거나 배경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해를 돕는 것이 이에 해당함 - 예상 독자에게 낯선 용어나 약어를 사용하였더라도, 그 의미를 간단히 풀이하거나 배경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해를 돕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는 감점하지 않음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점) 대부분의 어휘를 독자를 고려하여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독자의 이해를 돕는 쉬운 표현이나 보충 설명을 제시함 - (1점) 예상 독자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한 어휘가 자주 나타남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글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례가 두 개 이하면 2점 ○ 전체 글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례가 세 개 이상이면 1점 -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중등 교육을 이수한 성인을 예상 독자로 설정하는 일반적인 글쓰기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예를 감점함 (예) 사이버불링, 메이저/마이너, ICCPR 체약국, 대항 표현, 혐오의 피라미드 이론, 먹튀, 내로남불 등등



공통 사항

△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춘 완결된 글을 쓸 것(제목을 쓰지 말 것)

△ 분량: 1,000자 내외(±200자, 공백 포함), 시간: 90분

문항 1

로봇의 발달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최근 로봇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로봇세는 로봇의 노동으로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로봇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마련하자는 것이 로봇세 도입의 목적이다.

로봇세 도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글을 쓰시오.

문항 2

혐오 표현이란 정당화될 수 없는 혐오 감정에 근거하여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 공개적으로 모욕, 비하, 멸시, 위협을 하거나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혐오 표현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글을 쓰시오.

문항 3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일정한 자격 구비를 통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한 연령 제한의 상한선은 없다. 그러나 최근 고령자의 대처 미흡으로 일어난 자동차 사고가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일정 연령에 이르면 운전면허를 반납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고령자 운전면허 연령 제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글을 쓰시오.

논증적 글쓰기 능력 진단 기준안

기 획: 국립국어원 교육연수과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발행일: 2025년 4월 25일

인 쇄: (주)계문사

